서론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GETTING IN

입시의 윤리

능력 지표 따내기

서론

GETTING IN

2019년 3월, 고등학생들이 대학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연방 검찰은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예일, 스탠포드, 조지타운, 서던캘리포니아 등의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 교묘히 설계된 입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1]

이 음모의 중심에는 윌리엄 싱어라는 악덕 입시상담가가 있었다. 그의 사업은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부유한 학부모들이 대상이었다. 싱어의 회사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와 명예를 얻는 관문이 된, 지독히도 경쟁이 센 대학의 입시 미로를 요리조리 통과하는 일을 전문으로 했다. 명문대가 요구하는 최상급 성적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싱어는 냄새 나는 처방을 마련해주었다. SAT, ACT 등의 표준 시험 감독관들에게 돈을 찔러 주고 해당 학생들의 답안지를 조작해 성적을 부풀리도록 한 것이다. 또한 운동부 감독들에게도 돈을 써서 운동을 아예 할 줄 모르는 학생조차 특기생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자기 학

생의 사진을 실제 운동부원 사진과 바꿔치는 수법으로 가짜 특기생 자격증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싱어의 부정 입학 서비스 요금은 결코 싸지 않았다. 어느 유수 로펌 회장은 싱어의 돈을 받은 센터 감독관이 딸의 대입 시험 성적을 알맞게 조작해 주는 대가로 7만 5,000달러를 냈다. 어느 가족은 싱어에게 120만 달러를 주고 그 집 딸이 축구 특기생으로 예일대에 들어가게끔 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축구를 해본 적도 없었다. 싱어는 예일대 축구 감독에게 그 건으로 40만 달러를 안겼고, 그 감독 역시 기소되었다. 한 TV 배우와 패션디자이너인 그녀의 남편은 두 딸을 서던캘리포니아대에 부정 입학시키려 싱어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펠리시티 허프먼은 싱어에게 '할인 서비스'를 받았다. 1만 5,000달러밖에 내지 않았으니 말이다. 싱어는 그녀 딸의 SAT 성적을 손질해 주었다.[2]

이렇게 싱어는 '대입 부정 사업'을 8년간 운영하며 총 2,500만 달러를 챙겼다. 입시 부정 스캔들은 대중의 한결같은 분노를 일으켰다. 진영 대결이 심화되며 미국인들이 뭐 하나라도 일치된 입장을 갖기가 힘든 지금, 이 사건은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파에서 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붓게 만들었다. 〈폭스뉴스〉, 〈MSNBC〉,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도 한목소리였다. 명문대에 가려고 뇌물을 쓰고 조작을 한 게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모두가 동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는 단지 '특권층 부모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자기 자녀들을 명문대에 입학시켰다'는 데 따른 분노보다 더한 무언가로부터 나왔다. 이 사건은 상징적인 스캔들이었다. '누가 앞서가고 있으며,

그것이 왜 허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분노의 표출도 어김없이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위터와 〈폭스뉴스〉를 통해 이 사건에 연루된 '헐리웃 진보'를 비아냥댔다. "저 인간들이 어떤지 좀 보세요."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헐리웃 엘리트들, 진보 엘리트들은 늘상 평등을 주장했죠. 모두가 공정한 몫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야말로 사상 최대의 위선 아닌가요? 그들은 부정을 저지르고 그들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수표를 끊어줍니다.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을 가진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3]

한편 진보 쪽에서도 이 사건이 충분히 명문대에 갈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희생시킨 일이었음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스캔들을 '보다 널리 퍼져 있는 부정의가 불거져 나온 꼬투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입학 과정에 부와 특권이 끼치는 영향력은 심지어 부정이 없는 경우에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 연방검사는 기소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원칙에 대해 지적했다. "부자들만을 위한 입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4] 그러나 신문 사설과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곧바로 지적했다. '돈은 그동안 계속 입시에서 한몫을 해왔다'고. 특히 여러 미국 대학들이 동문의 자녀나 관대한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을 말이다.

입시 부정 스캔들로 진보 엘리트들을 비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맞서, 진보파들은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그저 그런 성적으로도 하버드대에 입학했다'며 그것은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인 그

의 아버지가 250만 달러를 그 대학에 기부한 덕'이라고 받아쳤다. 트럼프 스스로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 150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는데, 그의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2세와 이방카가 그 학교에 다닐 때였다.[5]

입시의 윤리

이 입시 부정 스캔들의 핵심인 싱어는 때때로 간당간당한 성적의 지원자들이 거액 기부 덕분에 '뒷문'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의 기법을 사용했다. 그가 "옆문 뚫기"라고 부른 그것은 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통상적인 '뒷문'은 자신의 부정 입학 수법보다 "돈이 열 배나 들며 확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거액 기부를 대학에 제의한다 해서 입학이 100퍼센트 보장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옆문 뚫기, 즉 뇌물 건네기와 시험 성적 조작하기는 입학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 "우리 '패밀리'는 확실함을 원했다"고 그는 설명했다.[6]

비록 돈이 들어가는 건 뒷문이든 옆문이든 마찬가지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뒷문은 합법적이며, 옆문은 불법이다. 미 연방검사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건물을 한 채 기부해서 자녀가 그 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와 위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짜 시험 점수, 가짜 자격증, 가짜 사진, 대학 직원에게 뇌물 먹이기… 이런 걸 이야기하

는 겁니다."[7]

싱어, 그의 고객들, 그가 뇌물을 준 운동부 감독들을 기소하면서, 뇌물 수수자들은 소속 학교에 자신들이 '1학년생 자격을 팔아먹었다'고 알리지는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들은 다만 정직하지 못한 계획에 동참했을 뿐이다. 합법성 여부는 논외로, 여기서 뒷문과 옆문의 차이점이 분명해진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액 기부로 대학에 보내려 할 때 그 돈은 대학에 들어가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교육 조건 개선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싱어의 계획에 따르면 돈은 제3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자체에는 거의 또는 전혀 보탬이 안 된다(적어도 하나의 케이스는 예외였는데, 싱어의 뇌물을 받은 어느 조정부 감독은 그 돈을 조정부의 여건 개선에 썼다. 그러나 다른 모두는 자기 주머니에 챙겼을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성 관점에서는 뒷문과 옆문을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부자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더 나은 지원자가 되게끔 했으며, 능력보다 돈이 앞선 사례이기 때문이다. 능력에 근거한 입시제도는 '정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싱어도 그런 표현을 썼다. 정문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만큼 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입시 방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보는 방식이다. 지원자는 그 부모가 가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 실력으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보면 그렇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다. 돈은 뒷문뿐만 아니라 정문 앞에도 떠돈다. 실력대로라고? 사실 실력은 경제적 우위와 구별해서 보기가 어렵다. SAT처럼 표준화된 시험은 그 자체로 능력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지적인 장래성을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여겨진다. 그러

나 실제로는 SAT 점수와 수험생 집안의 소득이 비례관계를 나타낸다. 더 부유한 집 학생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8]

부자 부모는 자녀를 SAT 모의 응시 과정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사설 입시 카운슬러를 고용해 입시 스펙을 다듬어준다. 또한 무용, 음악 레슨을 받게 해주고 펜싱, 스쿼시, 골프, 테니스, 조정, 라크로스, 요트 등의 엘리트 체육을 익히게 해준다. 대학 운동부에 뽑히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 봉사활동도 알선해준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을 어필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은 다 부유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 자격을 따주기 위해 벌이는 '돈이 많이 드는 일들'이다.

학비 문제도 있다. 아주 소수의 부유한 대학들만 학비를 낼 여력이 되는지 따지지 않고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 있는 학생들은 그게 절실한 학생들에 비해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9]

이 모든 점을 따져 보면 아이비리그 대학생 삼분의 이 이상이 소득 상위 20퍼센트 이상 가정의 출신임은 놀랄 일이 아니다. 프린스턴과 예일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60퍼센트 출신 학생보다 상위 1퍼센트 출신 학생이 더 많다.[10] 이 엄청난 입학 불평등은 일부 동문자녀 입학과 기여 입학제(뒷문) 때문이지만, 부잣집 학생들은 날개를 달고 정문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불평등을 지적하며, 고등교육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 스캔들은 더 넓고 깊이 퍼져 있는 불공정의 고약한 실마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 불

공정이란 고등교육 시스템이 능력주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지만, 입시 부정 스캔들을 일반적 입시 과정에서의 일탈로 보는 사람들과 이미 대학 입시에 만연해 있던 현상의 극단적 예에 불과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추론에는 공통된 전제가 있다. 능력과 재능으로 대입이 이뤄져야지, 학생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요인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그들 모두 '대입은 실력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암묵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대입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혜택을 누릴 자격을 갖는다고도 보고 있다.

이 당연하다시피 한 견해가 옳다면, 능력주의의 문제는 원칙 자체보다 그 원칙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정치 갈등이 그 점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의 논쟁은 능력주의 자체를 따지지는 않고, 어떻게 그 원칙을 실현하느냐를 놓고 이뤄진다. 가령 보수주의자들은 인종이나 민족을 입학 고려 요소로 보는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능력주의적 입학제도에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불공정을 시정하는 방법이며, 참된 능력주의는 특권층과 취약계층 사이의 출발선을 고르게 하는 조치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논쟁은 능력주의의 문제가 더 뿌리 깊은 것일 수 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 입시 부정 스캔들을 다시 살펴보자. 대중의 분노는 대체로 이 사건의 불법적인 면, 그리고 불공정성에 대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한 불법 행위를 부추긴 태도

다. 그 스캔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던 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가정, 즉 명문대 입시는 치열한 경쟁 대상이라는 가정 말이다. 명사들과 사모펀드 거부들이 연루되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돈으로 얻으려 했던 입학 자격은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선망의 대상이었기에 그만큼 주목받은 것이다.

왜 그럴까? 명문대 입학은 왜 이처럼 치열해져서 특권층 부모들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들을 입학시키게끔 만든 것일까? 부정까지는 아니어도 수만 달러를 들여 사설 입시 컨설턴트를 쓰고 모의 입시를 통해 자녀의 입학 기회를 높이는 일, 자녀들의 고교 시절을 고급 교과과정AP classes* 이수하느라, 이력서 잘 꾸미느라, 온갖 과외 활동의 부담을 지느라 인고忍苦의 시기로 만드는 일이 왜 필요해졌을까? 명문대 입시가 과연 어쩌다가 이토록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어, 연방수사국FBI이 이 사건을 캐내는 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도배하는 한편 기소에서 판결까지 몇 개월 동안 내내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일까?

* Advanced Placement
교과과정
미국 대학입시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학과정 인증시험 및 고급 교과과정.

입시 문제에 사회가 목을 매는 현상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점점 불평등이 늘어난 데서 기원한다. 누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에 의해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가장 부유한 10퍼센트가 나머지의 몫을 빼앗아감에 따라, 명문대에 들어갈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더 커졌다. 50년 전, 대학 입학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았다.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미국인은 다섯 명 가운데 한 명도 되지 않았고,

진학자들도 대체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호했다. 오늘날에 비하면 대학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11]

그러나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또한 학사 학위 소지자와 비소지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학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 역시 중요해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소수의 주요 대학들만 선호한다.[12] 부모의 행동방식 역시 달라졌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득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그런 두려움을 피하고자 부모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적극적으로 자녀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다. 그들의 시간 사용을 간섭하고, 학점을 관리하며, 활동을 지시하는 등 희망 대학의 입맛에 맞도록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간섭하게 되어버린 것이다.[13]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간섭하는 부모의 태도는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다.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여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적어도 중산층의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이해할 만한 정서의 결과물이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은 그동안 함께 지내온 계층하고만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회계층의 경직성에 대한 최상의 대응책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는 특권층 부모들이 화들짝 놀라서 자녀의 명문대 입시에 새삼 신경을 쏟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이 전부는 아니다. 싱어의 고객들은 자녀가 사회적 하향선을 타지 않도록 막는 것 말고도, 또 다른 목적에서 지갑을 열었다. 그보다 덜 민감하지만 더 의미심장한 목적이었다. 자녀가 명문대

간판을 달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능력주의의 광채'를 두르려고 한 것이다.

능력 지표 따내기

불평등한 사회에서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 능력주의가 원칙이 되는 사회에서는 승리자가 '나는 나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으로 여기에 섰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로 입시 부정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선물하려던 것이었다. 그들이 단지 자녀에게 부를 물려줄 마음뿐이었다면 신탁기금 등을 포함한 재물을 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원했다. 명문대 간판이 줄 수 있는 '능력의 지표' 말이다.

싱어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입시 부정 계획은 차선책이었다. 물론 SAT 점수 조작이나 가짜 특기생 자격증 등을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자녀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다. 옆문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그런 부정행위가 은폐될 때만 정문 입장과 동급의 능력주의적 영예를 얻는다. "우리 부모님이 요트부 감독에게 돈을 찔러줬어. 덕분에 난 스탠포드에 들어왔지." 누구도 이렇게 말하며 긍지를 느끼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능력주의적 대입이 갖는 특질은 뚜렷해 보인다. 정당한 스펙으로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역시 문제가 있다. 그러한 입학이 헌신과 노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오직 '자기 스스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해내도록 도와준 부모와 교사의 노력은 뭔가? 타고난 재능과 자질은 그들이 오직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했을까? 우연히 얻은 재능을 계발하고 보상해줄 수 있는 사회에 태어난 행운은?

노력과 재능의 힘으로 능력 경쟁에서 앞서 가는 사람은 그 경쟁의 그림자에 가려 있는 요소들 덕을 보고 있다. 능력주의가 고조될수록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더더욱 못 보게 된다. 부정이나 뇌물, 부자들만의 특권 따위가 없는 공정한 능력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결과를 해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 명문대 입학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해 동안의 노력 역시 그들이 '나의 성공은 내 스스로 해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준다. 그리고 만약 입시에 실패하면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인식도 심어주게 된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시민적 감수성에도 유해하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람 또는 자기충족적인 사람으로 볼수록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런 감성이 없다면 공동선에 대한 배려도 힘들어지게 된다.

대학 입시가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누가 여기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가?'는 오늘날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표면적으로 이 논쟁은 공정성 논쟁인 듯 보인다. '탐나는 물건이나 사회적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 모두가 정말로 공평한 기회를 갖고 있는가?'

그러나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 불일치는 공정성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공과 실패 또는 승리와 패배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도,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승리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외면 받고 있으며,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 한다.

오늘날 양극화된 정치 환경을 넘어 길을 찾으려면 능력주의의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능력주의의 의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가? 직업의 귀천 없음을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엘리트는 교만하다고 여기게끔 달라지지 않았던가? 세계화의 승리자들이 자신들은 '얻을 만한 걸 얻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그리고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지도록 바뀌지 않았던가?

엘리트층에 대한 분노가 민주주의를 위험 수준까지 밀어내게 될 때, 능력에 대한 의문은 특별히 중대해진다. 우리는 우리의 갈등 지향적 정치에 필요한 해답이, 과연 능력의 원칙을 더 믿고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계층을 나누고 경쟁시키는 일을 넘어 공동선을 찾는 것인가에 대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CHAPTER 1

승자와 패자

WINNERS AND LOSERS

-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 능력주의 윤리
- 굴욕의 정치
- 기술관료적 능력과 조직적 판단
- 포퓰리즘의 준동

1

WINNERS AND LOSERS

바야흐로 민주주의 위기의 시대다. 이러한 위기는 외국인 혐오증이 점점 심해지고, 민주주의 규범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권위주의적 인물들에 대한 지지 역시 높아지는 데서 느낄 수 있다. 이런 경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그 못지않게 심각한 사실은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들끓게 만들고 있는 불만에 대해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의 준동을 단지 이민과 다문화주의에 맞선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의 반발로 치부한다. 다른 일부는 이를 주로 경제 문제의 일환으로 본다. 글로벌 무역과 신기술이 빚어낸 일자리 감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적 저항을 편협한 시각이라고 무시하거나, 이를 다만 경제적 불만의 표출일 뿐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은 잘못이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승리한 것처럼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커지고 상류층에게는 혜택을,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을 안겨준 세계화가 진행된 데 대한 분노의 판결이었다. 이는 또한 경제와 문화 조류에서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의 항의를 나 몰라라 한 테크노크라트 정치에의 반발이기도 했다.

괴로운 진실은 트럼프가 각종 불안, 고민, 합당한 불만의 결과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주류 정당들은 그런 불평불만들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럽 민주주의에서도 비슷한 난국을 볼 수 있다. 유럽 주류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고민하기 전, 자신들의 사명과 목적을 되새겨 봐야만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유럽 민주주의를 대신해 버린 포퓰리즘적 저항에서 배워야 한다. 그들의 외국인 혐오증과 극단적 민족주의를 복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추한 감정과 얽혀 있는 정당한 불만을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러한 불만이 단순히 경제적인 불만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불만은 단지 임금과 일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존중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의 표적이 되어 버린 주류 정당과 집권 엘리트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은 보통 그 불만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진단했다. 이민자와 인종, 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으로, 또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말이다. 그러나 두 진단 모두 뭔가 중요한 점을 빠트리고 있다.

포퓰리즘적 불만에 대한 진단

첫 번째 진단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분노가 주로 인종적, 민족적, 성적 다양성의 꾸준한 증대에 대한 반동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 위계질서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데 익숙해져 있던 백인 남성 노동계급 유권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소수자로 밀려나는 일', '고향에서 이방인이 되는 일'이 두려운 나머지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이나 소수민족보다 자신들이야말로 차별의 희생자라면서, '정치적 올바름'에 근거한 공적 담론의 요구가 그들을 압박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지위에 흠집이 난 사람들에게 주목하며, 포퓰리즘적 정서의 추한 면을 강조한다. 본토 출생자 우선주의나 여성혐오, 인종주의 등등 트럼프와 그 밖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과격한 주장들을 그 증거로 내세우면서 말이다.

두 번째 진단은 노동계급의 분노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시대 변화가 너무도 빠른 데 대한 당황, 그리고 방향 상실의 결과라 본다. 새 경제 질서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은 끝났고, 혁신, 유연성, 경영자 마인드, 신기술을 평생 학습하려는 의지 등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한때 가졌던 직업은 저임노동자들의 나라로 아웃소싱되거나 로봇에게 넘겨지고 있으며, 일을 빼앗긴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난제에 부딪쳐 어쩔 줄 몰라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마치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동료 집단과 과거의 경력을 아쉬워한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의 피해갈 수 없는 파도 앞에 홀로서기를 강요당하는 듯 느끼는 이 노동자들은 이민자

들, 자유주의 집권 엘리트에게 신경질을 낸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저항하는 세력은 마치 날씨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안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그 밖의 정책을 통해 그들이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 적응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가장 잘 해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진단 모두 얼마간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포퓰리즘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포퓰리즘적 저항을 악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무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든 노동의 존엄성을 깎아내리고 많은 이들을 무력하고 왜소하게 느끼도록 만든 집권 엘리트의 책임은 면제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노동자의 사회적, 문화적 지위가 꾸준히 낮아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조류 탓이 아니었다. 주류 정당들과 집권 엘리트가 정책을 그렇게 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와 다른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의 민주주의 규범 위협에 직면해, 지금 그 엘리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자아낸 분노가 포퓰리즘의 불을 댕겼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소란이 역사적으로 유지해온 균형을 깨뜨린 정치적 실패에서 빚어졌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화

이 실패의 핵심에는 주류 정당들이 지난 40여 년간 세계화 프로젝트

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수행해 왔느냐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가지 점에서 포퓰리즘의 반격에 단서를 제공했다. 하나는 이를 통해 공공선public good을 기술관료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승자와 패자를 능력주의적으로 정의 내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기술관료적인 정치 개념은 시장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꼭 국가 개입이 일체 배제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시장경제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데 기본적 도구라 여기는 것이며, 따라서 더 큰 범위에서 시장을 신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치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기술관료적 정치가 이뤄진다. 그것은 실질적인 도덕적 논쟁에 대한 공적 담론을 실종시켰으며, 논란이 있는 이념 문제를 마치 '경제 효율 문제'처럼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문제인 듯 취급했다.

이러한 기술관료적 맹신이 포퓰리즘의 불만에 어떤 식으로 판을 깔아주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시장주도적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과 애국심도 약화시켰다. 상품과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코스모폴리탄식 정체성을 진보적이고 뛰어나다고 치켜세우면서 보호주의, 종족주의, 갈등 등이 갖는 협소하고 파편적인 정체성과 비교했다. 그들은 이제 '좌냐 우냐'의 기준이 아니라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의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소싱, 자유무역 협정, 무제한적 자본 유동성 등에 관한 비판은 '꽉 막힌 생각'일 따름이며, 세계화 시대에 종족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1]

한편 기술관료적 통치 방식은 여러 공적 문제를 기술 전문가들에게 맡김으로써 보통 시민들은 손을 써볼 수조차 없도록 만들었다. 이는 민주적 토론의 범위를 좁히며, 공적 담론의 내용을 공허하게 하고, 개인들이 점점 더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시장친화적이고 기술관료적인 세계화의 개념은 좌우 주요 정당들에게 고스란히 수용되었다. 특히 중도 좌파 정당이 시장 중심적 사고와 시장적 가치를 수용한 일은 무엇보다 의미심장했다. 이는 세계화 프로젝트의 진행에, 그리고 뒤따른 포퓰리즘의 반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가 당선될 즈음 민주당은 기술관료적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한때 그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와 중산층 유권자 대신 전문직업인들에게 한껏 기울어져 있었다. 브렉시트 당시의 영국 노동당, 유럽의 사회민주당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변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2]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는 "정부는 문제이고 시장이 해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정치무대에서 물러나자, 미국 빌 클린턴, 영국 토니 블레어,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등의 중도 좌파 정치인들이 뒤를 이었다. 그들이 시장에 대해 갖는 믿음은 이전의 리더들보다 엷었지만 각자의 사회에서 그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한몫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는 시장의 날선 이빨을 어느 정도 무디게 만들었으나, 레이건-대처 시대의 핵심 전제를 건드리지는 않았다. 시장 메커니즘이야말로 공공선을 달성하는 기본 수단이라는 전제였다. 이러한 믿음에 발맞춰 그들은 시장 중심적 세계화를 수용했고 경제가 갈수록 금융화되는 경향을 환영했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공화당과 손잡고 세계무역협정 추진과 금

융 산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의 혜택은 대부분 최상위층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평등 심화와 금권정치 강화에 대해 별 내색을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를 길들이고 경제권력을 민주적으로 제어한다는 원래 사명에서 벗어난 진보 진영은 그 매력을 상실해 버렸다.

이 모든 것은 버락 오바마가 정치무대에 등장했을 때 달라지나 싶었다. 2008년 대선 유세 때 그는 진보 진영의 공적 담론을 장악해 버린 경영자나 기술관료의 언어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 그가 보여준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적 이상주의는 백악관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금융위기 와중에 집권하게 된 오바마는 클린턴 시절에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경제 고문으로 앉혔다. 그들의 권고에 따라,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면서 은행들을 밀어주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울리던 도덕적 목소리는 침묵에 들어갔다.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정책으로 엮어내기보다 그저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긴급구제가 일으킨 지속적 분노는 오바마 행정부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마침내 좌우를 망라한 포퓰리즘의 반격에 봉화를 올렸다. 좌파에서는 '월가 점령' 운동과 버니 샌더스의 대선 출마가 있었고, 우파에서는 티파티*와 트럼프의 대선 출마, 그리고 당선이 있었다.

미국, 영국, 유럽에서 포퓰리즘의 발흥은 일반적으로 집권 엘리트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그러

* **Tea Party**
미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만든 '보스턴 티 파티'에서 따온 것으로, 복지국가 등 정부의 개입을 자유 억압으로 보고 저항한다는 의미로 2009년부터 시작된 보수 우파의 사회운동.

나 그 가장 두드러진 피해는 진보 및 중도 좌파 정당들이 입었다. 미국 민주당,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당(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지지율이 사상 최저급으로 떨어졌다), 이탈리아 민주당(지지율이 20퍼센트 이상 폭락했다), 프랑스 사회당(2017년 대선 제1차 투표에서 대선후보가 겨우 6퍼센트 득표했다) 등등.

다시 대중의 지지를 바라기 전에, 이들 정당은 시장중심적이고 기술관료적인 통치 방식부터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미묘하지만 그만큼 결정적인 뭔가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바로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승자가 경멸적으로 깔보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그러면 여러 노동계급 및 중산층 유권자들이 엘리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된 계기는 뭘까? 해답을 얻으려면 지난 수십 년간의 빈부격차 상황부터 알아봐야 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정 및 존중감의 조건과 관계가 있다.

세계화는 그 과실을 불균등하게 배분했다(절제해서 표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지금껏 늘어난 국민소득 대부분이 상위 10퍼센트에게 돌아갔고, 하위 50퍼센트는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실질소득 기준 노동가능 연령 인구의 중위소득은 약 3만 6,000달러인데,

그것은 4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오늘날 가장 부유한 1퍼센트의 미국인이 하위 50퍼센트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3]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이 믿음에 응해, 주류 정당과 정치인들은 기회의 평등을 늘림으로써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해왔다. 세계화와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 기회를 넓혔다(인종, 민족, 성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말이다). '기회 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최근 몇 년간은 정치인과 정당들 모두 이 구호에 목매다 못해 성경구절인양 받드는 모습이었다.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마코 루비오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이 모두 한결 같았다. 오바마는 이 구호를 약간 변형하기도 했다. 팝송 가사를 본떠 "하면 된다You can make it if you try"*라고 했던 것이다. 그의 집권 기간에, 그는 이 구호를 연설이나 공식 발언 등에서 140회 이상 써먹었다.[4]

그러나 이런 '사회적 상승 찬가'는 이제 속빈 강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 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결코 쉽지 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 **You can make it if you try**
1957년 진 앨리슨이 처음 불렀고 롤링스톤즈가 나중에 리메이크한 팝송의 제목이자 가사.

미국인은 대개 가난한 성인이 된다. 소득 기준 하위 5분위 가정 출신자는 스무 명 가운데 한 명만 상위 5분위에 이르렀고, 대부분은 중산층에도 이르지 못했다.[5]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은 미국보다 캐나다, 독일, 덴마크, 그 밖의 유럽 국가에서 더 많다.[6]

이는 불평등에 대해 미국이 오랫동안 변명해온 '계층 이동 가능성mobility'이라는 말과 들어맞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미국은 계급이 뚜렷한 유럽 사회에 비해 불평등 걱정을 덜 해도 돼. 우리 사회에서는 계층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미국인의 70퍼센트는 '가난한 사람이 자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유럽인은 35퍼센트만이 그렇게 여긴다. 이런 사회적 이동성 관련 믿음은 미국이 주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왜 그처럼 복지제도에 소극적인지 설명해준다.[7]

그러나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가장 잘 일어나는 국가들은 평등 수준 또한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사회적 상승의 능력은 가난이 주는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의지보다는 교육, 보건을 비롯해 직업 세계에서 개인을 뒷받침해 주는 수단에 대한 접근성에 달려 있는 듯 보인다.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폭발적인 불평등 증가는 사회적 상승을 가속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상류층이 그 지위를 대물림해줄 힘만 키워주고 말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명문대학들은 한때 특권층 자녀들의 입학에 걸림돌이 되었던 인종, 종교, 성, 민족 등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SAT는 계층과 가문이 아니라 학업 성적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약속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세습귀족제로 굳어져가

고 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 대학생 삼분의 이는 소득 상위 5분위 가정 출신이다. 장학금과 기타 지원책이 후하지만, 아이비리그 대학생 가운데 하위 5분위 출신자는 4퍼센트도 되지 않는다. 하버드와 그 밖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소득 상위 1퍼센트(연간 63만 달러 이상)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퍼센트 가정 출신 학생보다 많다.[8]

노력과 재능 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는다. 기회 균등에 대한 담론이 과거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이동성은 더 이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없다. 빈부격차에 대한 진지한 대응은 무엇이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직접 다뤄야만 하며,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으로는 무마될 수 없다. 사다리 자체가 점점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윤리

현실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능력주의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출발점에 서 있든 노력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이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완벽하게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만족스러울지는 의문이다.

도덕적으로 보자.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장 중심 사회가 성공자에게 후하게 베풀기 마련인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근거한 보상이나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재능의 소유(또는 결여)를 순전히 각자의 몫으로 봐도 될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재능 덕분에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이 노력했지만 시장이 반기는 재능은 없는 탓에 뒤떨어져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능력주의 이념에 찬성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정치 신념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덕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또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갖는 문제도 외면한다. 승자들 가운데, 그리고 패자들 가운데 능력주의 윤리가 부추기는 도덕적으로 좋지 못한 태도의 문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hubris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 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향한다. 그리고 그 불만은 정당화된다.

'공정한 능력주의 제도를 마련하자', '사회적 위치가 재능과 노력을 반영하게 하자'며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공(또는 패배)을 해석하는 방식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 재능과 노력을 보상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 건, 승자들이 승리를 오직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다 내가 잘나서 성공한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 그리고 그보다 운이 나빴던 사람들을 깔보도록 한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빠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자신의 운명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바닥에 있는 사람 역시 그 운명을 겪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기술관료적 정치의 도덕적 자세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몫이 운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보다 겸손해지게 된다. "신의 은총 또는 행운 덕분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어." 그러나 완벽한 능력주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거한다. 또한 우리를 공동 운명체로 받아들이는 능력도 경감시킨다. 우리의 재능과 행운이 우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연대감을 약화시킨다. 그리하여 능력은 일종의 폭정 혹은 부정의한 통치를 조장하게 된다.

조롱의 정치

아래쪽에서 올려다볼 때, 엘리트의 오만은 짜증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서고 싶지 않다. 그러나 능력주의 신앙은 그들이 입은 상처에 굴욕까지 보탠다. 자신의 곤경은 자신 탓이라는 말, "하면 된다"라는 말은 양날의 검이다. 한편으로는 자신감을 불어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준다. 승자에게 갈채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마저도 말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적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나의 실패는 자업자득이다. 재능이 없고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헤어나기 힘든 좌절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조롱의 정치politics of humiliation는 부정의의 정치politics of injustice와 다르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반격에 기름을 붓는 분노와 울분을 언제든 일으킬 잠재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잘 이해했으며 잘 써먹었다. 입만 열면 "기회" 운운하는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그 말을 거의 안 썼다. 대신 그는 승자와 패자에 대해 거친 표현을 퍼부었다(흥미롭게도 사회민주주의 포퓰리스트인 버니 샌더스 역시 '기회'나 '사회적 이동성'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대신 부와 권력의 불평등만 이야기한다).

집권 엘리트들은 지금껏 '대학 학위야말로 성공의 길이자 사회적 명망의 기반'이라고 가치를 부여해 왔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오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대학에 못 간 사람에게 고약한 낙인이 찍히게 됨을 나 몰라라 한다. 그러다 보니 포퓰리즘이 터져 나오고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었다.

오늘날 미국 정치를 나누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는 '대학 나온 사람 vs 안 나온 사람'이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비대졸자 표의 삼분의 이를 얻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은 고등교육 이수자들 사이에서 압승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비대졸자는 브렉시트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은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다.[9]

힐러리 클린턴은 1년 반 뒤 자신의 대선 전략을 평가·반성하면서 자신의 패배에 기여했던 능력주의적 오만을 드러내보였다. "저는 미국 GDP의 삼분의 이를 생산하는 지역의 삼분의 이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녀는 2018년 뭄바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저

는 낙관적이고,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장들에서 이겼답니다." 트럼프에 대해선 "흑인의 권리를 못마땅해 하고",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고장들에서 이겼다고 했다. 그녀는 세계화 승자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트럼프는 '루저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었다.[10]

민주당은 한때 특권층에 맞서 농민과 노동자의 편에 선 바 있다. 그러나 바야흐로 능력주의의 시대에,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미국의 부자와 고학력자들의 지지를 얻었다"라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굴욕의 정치에 아주 능란했다. 경제 정의라는 관점에서 그의 포퓰리즘은 가짜라고, '금권주의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계급 다수로부터 보건 서비스를 삭감하는 보건개혁안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주는 세제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런 위선에만 주목하면 요점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로 했을 때, 트럼프는 그것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그럴 듯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진짜 중요한 점이자 그의 정치이념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좀 산만해 보이는 연설에서 찾을 수 있다. "언제부터 미국이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들이 우리를 형편없는 나라라고 여겼습니까? 우리는 다른 국가와 정상들이 우리를 더 이상 깔보지 않기를 바랍니다."[11]

미국을 소위 '기후협약이라는 부담'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사실 일자리나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계가 없었다. 트럼프의 정치적 상상, 그 속

의 '굴욕 피하기'였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향을 불러왔으며, 그 가운데는 지구온난화를 염려하던 사람들까지 있었다.

기술관료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자는 덕이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했다. 플라톤은 공공의 정신으로 무장한 수호자 계급의 지지를 받는 철인왕이 다스리는 사회를 상상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인왕에는 반대했으나 그 역시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 공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정치와 관련된 능력은 부유함이나 좋은 가문이 아니라 시민적 미덕civic virtue과 실천지phronesis(공공선의 문제에 있어서 추론을 잘하는 실천적 지혜)의 탁월함이었다.[12]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능력을 갖춘 사람Men of Merit"이라 불렀다. 그리고 그들처럼 유덕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공직을 맡기를 바랐다. 그들은 세습귀족제에 반대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도 내켜하지 않았다. 선동정치가가 정권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연방에 상원을 두고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 등의 제도로 능력주의적 통치를 도모했다. 토머스 제퍼슨은 미덕과 재능에 근거한 '자연 귀족정'을 '부와 출신에 근거한 인위적 귀족정'보다 선호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런 정부 형태는, 자연적으로 고귀한 사람들을 정부 공직에 앉힐 수 있는 순수한 선택을 하는 데 최고의 것이다."[13]

이런 저런 차이가 있어도, 공자에서 미국 공화주의자들까지 이르는 이러한 전통적 능력주의는 통치에 적합한 능력에 도덕적, 시민적 미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같다. 그들 모두 공동선이란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시민의 도덕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 판단의 사이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공동선이란 GDP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해 버렸으며,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달려 있다고 못박아버렸다. 또한 정부 영역에서는 능력이란 곧 기술관료적 전문성이라고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통령 정책고문으로서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동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일에 시장 메커니즘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치 논쟁에서 중요한 도덕적, 시민적 문제들 즉 '불평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경 문제에서 살펴야 할 도덕적 부분은 무엇인가?', '일의 존엄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하나?' 등이 소외되고 있다.

능력과 공공선을 이처럼 도덕과 무관하게 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민주사회를 약화시킨다. 지난 40년 동안 목격해왔듯, 능력주의 엘리트는 통치를 제대로 못한다. 194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을 다스렸던 엘리트는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유럽과 일본을 재건했으며,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40년 동안 부자와 빈자 모두 혜택을 입는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반면

그 뒤를 이은 집권 엘리트들은 40년 동안 노동자 임금 정체, 1920년대 이래 최대의 소득 · 재산 불평등, 이라크 전쟁, 19년간 끌고도 아무 해결도 하지 못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정 악화, 2008년 금융위기, 인프라 악화, 세계 최고의 인구 대비 구금자 비율, 선거자금 제한 철폐와 선거구의 게리맨더링*에 따른 민주주의의 희화화 등을 이뤄냈다.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통치 차원에서만 맥을 못 추는 게 아니다. 민간 프로젝트 역시 그렇다. 오늘날 공동선이란 주로 경제적 차원에서 풀이된다. 연대성을 높인다거나 시민들의 결속을 단단히 하는 일 따위는 GDP로 측정되는 소비자 선호 만족 위주의 일에 비하면 별 관심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공적 담론은 갈수록 너절해져 간다.

* **게리맨더링**
1812년 미국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매사추세츠주의 선거구를 개편한 데서 유래된 말로, 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일.

오늘날 통용되는 정치적 참여, 그것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협소하고, 관리 위주이며, 기술관료적인 이야기 수준이다. 아니면 각 정당 지지자들이 상대방에게 퍼부어대는, 상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일방적인 부르짖음이다. 이 공허한 정치 공론장은 정치적 스펙트럼 상에서 어떤 이념의 소유자라도 무력감과 짜증을 겪게끔 한다. 그들은 건실한 공적 담론의 부재 현상이 '그만큼 중요한 정책상의 고민거리가 없기 때문'이 아님을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다만 그런 중요한 정책상 결정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대중의 눈과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산업 분야에 휘둘리곤 하는 행정기구, 중앙은행, 주식시장, 선출직 관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로비스트들 등등이 그런 결정의 주체인 것

이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공적 담론이 공허해지는 차원을 넘어서, 기술관료적 능력주의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뒤틀어놓았다. 그리하여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명예는 높아지고, 대부분의 노동자는 그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추락하여 그들의 사회적 기여 또한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부딪친다. 기술관료적 능력주의의 이러한 면은 분노와 양극화에 찌든 오늘날 우리의 정치 양상과 대부분 맞아 들어간다.

포퓰리즘의 준동

60년 전, 영국 사회학자 마이클 영은 능력주의가 빚어낼 오만과 분노를 예견했다. 사실 그 용어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마이클 영이다. 1958년 출간한 《능력주의의 등장 *The Rise of the Meritocracy*》이라는 책에서, 그는 어느 날인가 계급 장벽이 극복되고 누구나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진정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14]

어찌 보면 이는 환영할 상황이다.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마침내 특권층의 아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니 말이다. 그러나 영은 그게 과연 순전히 기뻐할 만한 상황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을, 패자에게 굴욕을 퍼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승자는 자신의 승리를 '나의 능력에 따른 것이

다.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부정할 수 없는 성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다'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덜 성공적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리고 실패자는 '누구 탓을 할까? 다 내가 못난 탓인데'라고 여기게 된다.[15]

마이클 영에게 능력주의는 추구해야 할 이상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적 불화를 불러오는 제도였다. 수십 년 전, 그는 지금 우리의 정치를 오염시키고 포퓰리즘의 분노를 부채질하는 가혹한 능력주의 논리를 꿰뚫어 보았다. 능력주의의 폭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문제는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했다'는 것이다.

기술 혁신과 아웃소싱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유형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도 하락과 맞물렸다. 경제 활동이 '물건 만들기'에서 '돈 관리하기'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한 헤지펀드 매니저나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 전문 직업인들이 사회적 보상을 과하게 챙기면서 전통적인 일자리에 대한 명망은 급락·약화되었다.

주류 정당과 엘리트는 이러한 정치 차원을 놓치고 있다. 그들은 시장 주도적 세계화에는 단지 '분배의 정의' 문제만 따라온다고 여긴다. 세계 무역과 신기술, 경제의 금융화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포퓰리즘의 불만과 기술관료적 통치의 실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 담론을 이끌어갈 때 마치 시장에서 아웃소싱하듯 도덕과 정치 문제를 젖혀 버리거나, 전문가와 기술관료에게 온통 맡겨 버리면 되는 듯 해왔다. 결국 정책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민주적 합의는 사라져 버렸다. 이처럼 공적 의미가 텅 비게 되면 한결같이 정체성과 생득성에 대한 거칠고 권위주의적인 형태, 예를 들면 종교 근본주의나 적대적 민족주의 등이 그 공백을 메우기 마련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이다.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40년 동안 계속되며 정치 담론의 장을 공동화했고, 보통 시민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으며, 포퓰리즘의 반격을 촉발했다. 그 반격이란 텅 비어버린 공론장에 무자비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민족주의를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이다.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

CHAPTER 2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 도덕의 짧은 역사

"GREAT BECAUSE GOOD": A BRIEF MORAL HISTORY OF MERIT

- 왜 능력이 중요한가
- 우주적 능력주의
- 구원과 자기 구제
-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 부와 건강
- 자유주의적 섭리론
- 역사의 옳은 편
- 도덕 세계의 궤적

2

"GREAT BECAUSE GOOD": A BRIEF MORAL HISTORY OF MERIT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사실 그렇게 해야 대체로 옳다고 여겨진다. 화장실 고칠 배관공이나 이를 치료해 줄 치과의사를 찾는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을 찾을 것이다. 하긴 온 세상을 뒤져서 찾는 게 아닌 이상, '최고'는 아닐 수 있겠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그런 일을 해주길 확실히 바랄 것이다.

사람을 채용할 때 후보자의 능력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는 효율성이다. 내 일을 봐주는 배관공이나 치과의사가 무능하지 않고 유능하다면 내게 이익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정성이다. 가장 유능한 후보자를 그 종교나 인종, 성별 때문에 물리치고 보다 덜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잘못이다. 비록 나의 편견에 충실하려는 마음에서 수준이 떨어지는 배관공이나 치과의사를 선택하려 한다고 해도, 그러한 차별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 더 능력 있는 후보자는 자신이 부정의한 처사의 희생자라고 정당하게 불평할 수 있다.

능력에 따른 채용이 선하고 분별 있다고 하면, 능력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능력주의로 인한 분노가 전 세계 민주정치를 변형시킬 만큼 강력한데, 어떻게 능력주의 원칙은 그토록 평온무사할 수 있을까? 정확히 언제, 어떻게 능력의 혜택이 해독으로 바뀌는 걸까?

왜 능력이 중요한가

사회가 능력에 따라 경제적 보상과 지위를 배분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다. 그 중 두 개는 능력 우선 채용에서 '바람직하다'고 본 효율성과 공정성을 원칙화한 것이다. 노력과 선도적 시도, 재능에 후하게 보상하는 경제체제는 각각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보상하는 체제나 정실주의로 정해진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체제보다 더 생산적일 것이다. 오직 각자의 능력대로만 보상하는 시스템은 공정성을 갖는다. 오로지 실제 성취만으로 사람들이 구별될 뿐,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차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 위주로 보상하는 사회는 또한 야망이라는 차원에서도 매력적이다. 효율성을 늘리고 차별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 운명이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생각,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직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 우리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며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 재능과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높이 오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기분 좋은 낙관론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질

자격이 있는 것을 갖는다'는 도덕적으로 뿌듯한 결론을 수반하기도 한다. 나의 성공이 스스로의 덕이며 재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면 그 성공을 자랑할 만하다. 내 성취에 따른 보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이다. 따라서 능력주의 사회는 이중으로 고무적이다.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하며, 각자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당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 원칙은 폭압적으로 변할 수 있다. 사회가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할 때뿐만 아니라, 따를 때도 (더더욱) 그렇다. 능력주의 이상의 어두운 면은 가장 매혹적인 약속, 즉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다'는 말 안에 숨어 있다. 이 약속은 견디기 힘든 부담을 준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책임에 큰 무게를 싣는다. 개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은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도덕적 행위자이자 시민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주어진 결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삶에서 주어진 결과'라는 말조차 무한 책임론에 일정한 한계를 도덕적으로 부과한다. '주어진 결과(몫, lot)'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섭리 등에 따라 정해져 주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1]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넘어서 행운 또는 은총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로써 우리는 소득과 직업은 능력 문제가 아니라 신의 은총 문제라는 옛 논쟁을 떠올린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얻는 것들인가, 받는 것들인가?

우주적 능력주의

운명이 능력의 반영이라는 관념은 서구 문화의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성서 신학은 '자연의 사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좋은 날씨와 풍성한 수확은 사람들의 선행에 대한 신의 보답이다. 가뭄과 역병은 죄악에 대한 징벌이다. 배가 폭풍을 만나면, 선원 중에 누가 신을 노하게 했는지를 찾으려 한다.[2]

과학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고방식은 순진하고 무지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이 사실 그렇게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이야말로 능력주의 사고의 기원이다. 그것은 권선징악의 도덕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나타낸다. 부는 재능과 노력의 상징이며, 가난은 나태의 상징이라는 현대의 친숙한 시각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성서적 관점의 두 가지 특징이 오늘날의 능력주의와의 유사성을 드러낸다. 우선 인간의 능력에 대해 한껏 강조한다. 또한 불운한 사람들에 대해 둘 다 냉혹하다. 다른 점이라면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중점을 두는 반면, 성서적 능력주의는 모든 것을 신에게 돌린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상과 벌을 나눠주는 주체는 신이다. 홍수든 가뭄이든, 아니면 가뭄 끝의 단비든.

하지만 신이 인간의 선에 상을, 악에 벌을 내리느라 눈코 뜰 새 없다는 것은 너무 인간중심적인 시각이다. 역설적으로 신은 우리에게 구속받게 되며, 신이 정당한 이상 우리에게 응분의 대가를 내려야만 하게 된다. 신이 상벌의 주체라 하지만 그는 각자의 실적에 따라 처리할 뿐

임의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신 앞에서라도 인간은 자기가 받을 것을 받으며 따라서 자기 운명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은 불운을 겪는 사람에게 냉혹한 태도를 부추긴다. 그 고통이 심할수록 '오죽 제대로 못했으면 저럴까' 하는 의심이 짙어진다. 성서의 〈욥기〉를 떠올려 보자. 당당하고 의로운 인물이던 욥은 아들과 딸들이 폭풍우에 희생된 것을 비롯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난을 겪었다. 늘 신께 신실했던 욥은 어째서 그런 고난이 자신에게 내렸는지 알 수 없었다(그는 자신이 우주적 도박의 대상이 되었음을, 신이 사탄에게 욥의 신심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려고 했음을 모르고 있었다).

욥이 잃어버린 가족을 위해 통곡하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은(과연 친구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뭔가 말도 못할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그에게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떠올리라"고 윽박질렀다.[3] 이것을 초기적인 능력의 폭정 사례라 볼 수 있겠다. 고난은 곧 죄의 표시라는 가설로 무장한 욥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이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며, 따라서 욥이야말로 그의 자녀들의 살해자라고 잔혹하게 을러댔다. 비록 욥 자신은 스스로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그 역시 친구들처럼 능력의 신학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그는 신께 부르짖었다. 대체 왜 내가, 의로운 사람인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마침내 신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욥과 그 친구들이 가졌던 능력주의 가설을 부정함으로써, 희생자를 단죄하는 잔인한 논리를 부정한다. 발생하는 모든 일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처벌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천명한다. 모든 빗방울이 선한 자의 곡식을 축복하려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뭄이 사악한 자를 징계하려 드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아무도 살지 않는 황무지에도 비는 내린다. 신의 창조 또한 오직 인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우주는 인간중심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기에는 너무 크며, 신의 뜻 역시 인간의 이해력을 벗어나 있다.[4]

신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한다. 그러나 신의 질서를 인간의 도덕 논리로 이해하려 했던 점에 대해서는 비난한다. 이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난 능력주의의 신학에서 급격히 이탈하는 것이다.[5] 자신은 우주적 능력주의의 주재자가 아니라 하면서, 신은 스스로의 무한한 권력을 강조한다. 그리고 욥에게 굴욕 속에서 교훈을 얻으라고 가르친다. 신에 대한 믿음은 창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이 각 개인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합당한 상이나 벌을 내리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과 자기 구제

능력주의 논쟁은 구원을 논의할 때 다시 기독교에서 등장한다. 신앙이 독실한 사람은 교리를 따르고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신이 각자의 생활 태도와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가?[6] 첫 번째가 더 정당해 보인다. 권선징악의 틀에 맞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 신의 전능함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며 따라서

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신은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능력을 인정해야만 하게 된다. 구원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가 되며, 따라서 신의 무한한 힘에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두 번째는 구원을 노력과 무관한 선물로 보며, 따라서 신의 전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신이 세상 모든 것의 주재자라면 악의 존재 역시 주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이 정의롭다면 그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고통과 악이 왜 발생하도록 두는 것인가? 신이 전능함에도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정의롭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학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견해가 병립하기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매우 어렵다. '신은 정의롭다.' '신은 전능하다.' '악은 존재한다.'[7]

이 난제를 푸는 방법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악의 존재에 대한 책임은 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겨진다. 만약 신이 어떤 규범을 세웠을 뿐 아니라 개인에게 그것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자유를 부여했다면, 우리는 옳은 것 대신 잘못된 것을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쁜 일을 한 자는 현세 또는 내세에서 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그의 고통은 악이 아니라 위반에 대한 징벌이다.[8]

일찍이 이런 해답을 지지했던 사람으로 5세기 영국 수도승 펠라기우스가 있다. 그가 비록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나 최근의 일부 주석자들은 그가 초기 기독교 신학에서 자유의지와 개인 책임을 내세운 대표적 인물이며, 그야말로 자유주의의 선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9]

하지만 펠라기우스의 생전에 그의 해답은 맹렬한 반대에 부딪쳤다. 적어도 그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

스는 그런 해답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신의 전능함을 부정하며 최고의 은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이 구원을 스스로 얻어낼 만큼(비록 선행과 계율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자족적이라면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내려올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은총 앞에서의 겸허함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자부심으로 바뀌고 만다.[10]

구원은 오직 은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행동은 능력주의를 다시 불러들였다. 교회의 예식과 절차들(세례, 기도, 미사 참석, 성사 참례 등등)은 그것들이 참여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를 주지 않는다면 계속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신앙과 종교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한다 해서 신의 총애를 받거나 신에게 점수를 딸 수는 없다는 믿음을 오래 유지하기란 어렵다. 신앙이 외적 행동으로 표현되고 교회의 복잡한 예식들로 전달·강화될 때, 감사와 은총의 신학은 피치 못하게 자부심과 자기 구제의 신학으로 미끄러져 내린다. 이것이 적어도 마르틴 루터가 자기 시대의 로마 교회를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비록 이미 그때로부터 11세기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능력에 따른 구원론을 비난했지만 말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능력에 대한 반론에서 피어났다.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저항은 부분적으로는 교회의 일탈에 대한 것이었다. 부자들이 구원을 돈으로 사는(엄격하게 보면 이는 구원을 산다기보다는 참회 기간을 감면받는 일, 다시 말해서 연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줄여 주는 일이었지만) 부패한 관행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의 보다 폭

넓은 관점은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했다. 구원이란 오직 신의 은총일 뿐이며, 선행이든 계율 준수든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 기도할 뿐이며 그 이상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루터에게 있어 구원받을 자의 선택은 오로지 주어지는 것, 개인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성도들과의 교우나 미사 참석, 그 밖의 일들로 신을 설득해서 우리의 구원받을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일, 그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었다.[11]

루터의 엄격한 은총론은 분명 반反능력주의적이었다. 그것은 선행에 따른 구원의 여지를 없애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인간의 자유를 일체 부정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청교도들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들이 가져오게 될 치열한 능력주의적 직업(노동)윤리들로 이어졌다.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막스 베버는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12]

루터처럼 청교도에 큰 영향을 미친 장 칼뱅은 구원이란 신이 내린 은총의 산물일 뿐이며 인간의 실적이나 자격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단죄 받을지는 예정되어 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성례聖禮도 아무런 효험이 없다. 그래도 신자는 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은총을 받기 위한 수단이 전혀 아니다.[13]

칼뱅의 예정론 교리는 견디기 힘든 압박감을 주었다. 사후에 가게 될 자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긴다면, 자신이 구원받게 될지, 저주받게 될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일 것이다. 그러나 신은

그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행동을 보고서 누가 구원받았는지 정죄받았는지도 판단할 수 없다. 선택받은 이들은 '신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14]

베버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과연 선택 받았을까 하는 의문은 반드시 교인들의 다른 모든 관심사를 뒤로 돌려버리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과연 이 은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떠오른다." 이 의문의 지속성과 절박성 때문에 칼뱅주의자들은 일종의 직업윤리를 만들어냈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서 직업을 소명으로 받았기에 그 직업에 매진하는 일은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었다.[15]

그 핵심은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돈을 벌어 마음껏 써보려고 일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에서의 일탈이며, 일종의 부패로 여겨졌다. 칼뱅주의는 근면과 금욕주의를 결부시켰다. 베버는 열심히 일하되 소비는 되도록 절제하는, 이런 규제된 접근이 부의 축적을 통한 자본주의의 발흥을 가져왔다고 지적한다. 심지어 애초의 종교적 동기가 사라진 뒤에도,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와 금욕주의는 자본주의적인 축적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에 충실해서 보면 이 드라마의 주요 포인트는 능력과 은총 사이의 고조된 긴장에 있다. 평생 묵묵히 힘들게 일한 삶, 그것은 분명 구원의 티켓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장본인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는 될 수 있다.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증명한다.

하지만 세속적 행동을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관점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관점으로 미끄러지는 일을 방지하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

을지 몰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심리적으로, 신이 그의 영광을 높여 줄 신실한 노력을 일체 외면한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내가 나의 선행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있음을 추정해도 된다고 권유받는다면, 나의 선행이 나의 구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론을 피하기 힘들다. 신학적으로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생각, 능력주의적인 생각은 이미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가톨릭에서는 예식과 성례를 잘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에서는 신의 율법을 잘 지키고 시나이 산의 계명(십계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소명으로서 직업이라는 칼뱅주의적 관념이 청교도의 직업윤리에 녹아들면서, 그 능력주의적 함의는 더 이상 제어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구원은 힘써 얻는 것이며, 직업은 그 수단이지 단순한 증표가 아니다. 베버는 이렇게 본다. "이는 실질적으로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칼뱅주의자는 때때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 자라고 표현하고, 더 정확하게는 자기 구원의 확신자라고 표현한다." 일부 루터파는 그런 견해가 "행함을 통한 구원이라는 교리로의 후퇴"를 의미하며 그 교리야말로 루터가 신의 은총에 대적하는 것으로 배척했노라고 비판했다.[16]

칼뱅의 예정설과 구원은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통해 반드시 현시된다는 생각과 결합됨으로써, '세속적 성공은 구원받은 사람의 훌륭한 증표'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베버는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신의 섭리는 각자 어떤 직업을 갖고 뭐에 힘써야 할지 제시하였다"고 설명한다. 이는 노동 분업에 신성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경제 질서가 섭리의 작용이라고 이해하려는' 접근을 지지해준다.[17]

세속적 활동으로 자신의 구원 여부를 증명하는 일을 통해 능력주의는 복귀한다. 중세의 수도사들은 세속적인 추구를 금욕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일종의 '영적 귀족주의'를 추구했다. 그러나 칼뱅주의와 함께 기독교적 금욕주의는 "수도원의 문을 박차고 나와, 생활의 장바닥으로 발을 내디뎠다." 모든 기독교인은 직업을 갖고 세속적 활동에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도록 요구받았다. "예정설에 뿌리박은 교리를 세움으로써" 칼뱅주의는 "수도사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 밖 영적 귀족주의를 대신하여, 세상 속에서 신의 예정된 성자들로 이루어지는 영적 귀족주의"를 수립했다.[18] 자신들이 선택 받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영적 귀족들은 정죄 받게 될 자들을 멸시한다. 여기서 베버는 내가 '능력주의적 오만의 초기판'이라 부르는 것을 살짝 제시한다. "선택된 자들과 성스러운 자들에게 주어진 은총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이들은 그 이웃들의 죄에 대해서도 일정한 태도를 지닌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약한 자들'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동정적 이해가 아니다. 신의 적으로써 영원히 정죄 받은 자들에 대한 증오와 혐오다."[19]

프로테스탄트의 직업윤리는 자본주의 정신을 생겨나게 할 뿐만이 아니다. 자기 구제와 자기 운명에 대한 책임의 윤리, 즉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에 적합한 윤리를 장려한다. 이런 윤리의식은 큰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책임과 함께, 자수성가의 어두운 면이라 볼 수 있는 '불안하면서도 치열한 경쟁'을 초래한다. 은총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주었던 겸손함.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나오는 오만으로 대체된다.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루터, 칼뱅, 청교도에게 능력에 관한 논쟁들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었다. 신에게 선택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은총의 선물로서 구원을 얻은 것인가? 한편 지금 우리에게 능력에 관한 논쟁들은 세속적 성공과 연결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통제 범위 밖의 요인들이 작용해 성공한 것인가?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하나는 종교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문제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 시대의 능력주의에는 그것이 탄생했을 당시 신학적 논쟁의 딱지가 붙어 있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는 은총과 능력, 무력함과 자기 구제 사이의 치열한 변증법에서 시작되었다. 자수성가의 윤리는 감사와 겸손의 윤리를 압도했다. 일과 노력은 칼뱅주의의 예정설과 열띤 구원의 증표 탐색에서 출발해, 독자적으로 중대성을 갖게 되었다.

자수성가론과 능력주의의 승리는 오늘날 세속 위주 경향의 결과라고 여기기 쉽다. 신에 대한 믿음이 퇴보하면서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가 힘을 얻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존재, 자기충족적 존재로 볼수록 우리의 성공에 대해 빚진 느낌이나 감사의 마음을 가질 까닭은 줄어든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종종 떠올리는 '섭리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 행위자이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

은 능력주의의 일면일 뿐이다. '성공한 사람은 그럴 만해서 성공했다'는 신념이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한 승리주의triumphalism적 측면으로부터 승자들 사이의 오만, 패자들 사이의 굴욕이 나온다. 이는 세속 사회에 남아 있는 섭리론의 도덕적 어휘를 반영한다.

"운 좋은 사람은 운이 좋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경우가 드물다." 막스 베버는 이렇게 보았다. "이를 넘어서, 그는 자신이 그런 행운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납득할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그럴 만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비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운이 나쁜 사람들도 자신의 당연한 업보일 뿐이라고 믿기를 바란다."[20]

능력의 폭정 중 일부는 이러한 충동에서 비롯된다. 오늘날의 세속적 능력주의 질서는 이전의 섭리론 신앙처럼 성공에 도덕의 틀을 씌운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를 통해 신의 섭리를 불러온 게 아니라 해도(그들은 스스로의 노력과 근로에만 감사할 뿐이다), 성공은 그들의 탁월한 덕성을 반영한다.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승리주의적 측면은 일종의 '신 없는 섭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사에 개입하는 신이 없이도 일정한 섭리가 발동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고방식은 경제 경쟁에서의 도덕론에서 더욱 고조된다. 이는 승자를 추켜올리고 패자를 깎아내린다. 문화역사학자 잭슨 리어스는 칼뱅주의의 섭리론과 원죄론이 사그라진 뒤에도 섭리론적 사고가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칼뱅

과 청교도에게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 그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은 없고, 구원은 오로지 신의 은총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21]

> 그러나 자유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인간 능력을 강조했을 때, 성공은 개인의 능력과 섭리적 계획의 일치를 나타내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의 섭리론은 때로는 지지부진하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확실하게 경제적 현상 유지를 정신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섭리는 암암리에 부의 불평등을 지지했다.[22]

리어스는 미국의 공공 문화를 운의 윤리의식과, 보다 강력한 자수성가의 윤리의식이 벌이는 불공평한 각축장으로 보았다. 운의 윤리는 인간의 이해와 통제력을 벗어나는 삶의 차원을 중시한다. 세상이 반드시 각자의 능력에 맞는 보상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인생에는 신비, 비극,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과 같은 〈전도서〉의 내용은 이런 윤리의식을 잘 표현한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았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라고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기능을 갖춘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이는 때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로다."[23]

반면 자수성가의 윤리는 인간의 선택을 영적 질서의 중심에 놓는다.[24] 이는 신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섭리적 질서에서의 역할을 뒤바꾼다는 뜻이다. 리어스는 자수성가와 자기통제의 윤리가 복음주의 개신교 내부에서 나왔음을 보여주면서, 결국 그 계열의 지배적 사

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은총에 의한 구원'에서 루터가 매도했던 '일을 통한 구원'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18세기 중반까지, 일이란 성사가 아니라(전통 가톨릭에서처럼) 세속적인 도덕적 행위를 의미했다.[25] 그러나 그런 세속적 노력은 아직도 섭리론적 틀에서 힘을 얻고 있다.

> 개신교 신앙에 따르면 섭리는 아직도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계획이 펼쳐지는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의 목표에 동조자가 될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복음주의적 합리성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섭리와, 전례 없이 유력한 인간의 노력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적 태도를 마련했다.[26]

인간의 노력과 섭리에 따른 성별聖別을 하나로 엮는 일은 능력주의로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했다. 이는 운과 언약의 윤리를 때려부수고, 세속적인 성공과 도덕적인 자격을 결합시켰다. 리어스는 이를 도덕적 손실로 보았다. "자기 운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덜 강조하는 문화는 보다 관대하고 인자할 수 있다." 운이 예측 불가능한 것임을 더 중시하는 경우, 행운의 소유자들이 '내가 만약 불운했더라면?' 하는 상상을 해보도록 만든다. 그리고 능력주의 신화에 따른 오만방자함을 넘어서, 사람의 팔자는 예측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끔 한다.[27]

리어스는 도덕적, 그리고 시민적 손실을 뚜렷하게 지목한다.

> 자기 통제의 문화는 기독교적 섭리론을 뽐내며 저속하게 구는 형태로 지속되었고, 이것이 두 세기 동안 미국 도덕성의 근간이 되었다. 비록 이제는 즐

겨 쓰는 용어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기술관료적이지만 말이다. 섭리론에서 세속적인 성공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우리가 신의(또는 '진화의') 계획 중 일부일 뿐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인 체제를 운영하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 중 일부이기도 하다는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그런 관점을 심지어 국제 분쟁에까지 적용하는 모든 태도에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다.[28]

저마다 가질 만한 것을 갖는다는 섭리론적 관념은 지금의 공적 담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는 두 종류다. 하나는 오만한 목소리, 또 하나는 징벌의 목소리다. 두 가지 다 우리 스스로 운명을 책임질 것을 강조하며, 성공도 실패도 자기 탓이라고 본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섭리적 오만의 두드러진 예다.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모험적이고 탐욕적인 행동이 세계 경제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세금을 털어서 막대한 구제금융이 동원되었다. 주택 소유자와 우량기업들까지도 피해 복구에 애를 써야 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은 얼마 뒤 스스로에게 수백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다. 대중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토록 후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받자, 골드만삭스의 CEO였던 로이드 블랭크페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자신과 그의 동료 은행가들을 일컬어) 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29]

섭리적 징벌론은 최근 일부 기독교 보수파에서 막대한 태풍 피해를 비롯한 여러 재난 이후에 들고 나왔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그 폭풍이 마디그라* 같은 성적 타락, 집단 성교, 그 밖의 죄업으로 얼룩진 '악의

도시'에 대한 신의 응보라고 선언했다.[30] 2009년 아이티에서 지진으로 20만 명 이상이 숨지자 TV 설교자인 팻 로버트슨은 그 재난이 1804년 프랑스에 맞서 아이티 노예들이 봉기했을 때 악마와 맺은 계약의 결과라고 주장했다.[31]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9.11 테러가 자행된 며칠 뒤, 제리 폴웰 목사는 로버트슨의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테러를 미국의 죄에 대한 신의 응보라고 풀이했다.

*
Mardi Gras
본래 가톨릭 교회에서 사육제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 회개 기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마음껏 즐기자는 뜻에서 예부터 화려한 축제와 음주가무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가톨릭교도가 아닌 사람들도 이때를 이용해 여러 일탈을 벌이는 경우가 일반화됨으로써 '난잡한 축제'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부담을 져야만 할 것이다. 신께서는 조롱을 참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4,000만 명의 죄 없는 아기들을 없앰으로써 신을 격분케 하였다. 나는 이교도들과 낙태 찬성론자들, 그리고 여성주의자들,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다른 생활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에서는 하나같이 미국을 세속화하려고 애쓴다. 나는 그들의 얼굴 앞에 손가락을 내밀고 말할 것이다. "당신들이 이 일을 초래했어."[32]

큰 재난을 신의 징벌로 풀이하는 일은 기독교 섭리론의 전유물은 아니다. 2011년 대지진이 일본을 덮치며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유명한 극우파였던 도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는 이 사태를 "일본이 물질주의에 빠진 데 대한 천벌"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일본 정신을 오랫동안 좀먹어온 이기주의를 씻어 내릴 쓰나미가 필요했습니다."[33]

부와 건강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기독교는 '번영의 복음'이라 불리는 떠들썩한 신종 섭리론을 내놓았다. TV 설교자들과 이 나라의 초대형 교회들의 전도사들 일부가 이끌었던 이 섭리론은 신이 믿는 자에게 부와 건강을 내리신다고 했다. 은총을 인간이 감히 주장할 수 없는 신의 선물이라 보는 시각에서 한참 떨어져서, 이 번영의 복음은 인간 능력과 의지를 한껏 강조했다. 이 운동의 배경을 마련한 20세기 초의 전도자인 케니언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여기도록 권했다. "신의 능력은 나의 것이다. 신의 힘도 나의 것이다. 그의 성공은 내 것이니, 나는 승리자다. 나는 정복자다."[34]

번영 복음주의 역사가인 케이트 바울러는 그 가르침이 다음의 구절로 집약된다고 한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증거는 부유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다.[35] 미국 최대의 교회인 휴스턴 교회의 유명한 번영 전도사 조엘 오스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복한 삶을 살도록 돌아가신 겁니다."[36] 그의 베스트셀러 저서는 신앙에서 비롯된 축복의 사례를 여럿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그가 살고 있는 고급 맨션, 또 그의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 클래스로 승격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들어 있다.[37]

축복의 복음이란, 부와 건강이 유덕함의 증표라는 능력주의적 신념과는 달리 행운 앞에서의 겸손함을 불러일으킬 것도 같다. 그러나 바울러가 보듯, "축복받은"이란 은사와 보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이는 순수한 감사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는 이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될 만해서 되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감사하다. 나 자신이여. 이로써 나는 될성부른 나무로 자라났다." 이야말로 행운이 아니라 고된 노력으로 성공한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믿는 미국 사회에서는 최적의 해석이다.[38]

비록 번영 복음을 설파하는 대형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만 100만 명에 이르지만, 그것이 고된 노력과 자기 구제에 대한 미국적 믿음에 주는 영향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타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의 거의 삼분의 일이 "신께 헌금을 하면 신은 더 많은 돈으로 갚아주신다"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61퍼센트는 "신은 그의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번영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었다.[39]

21세기 초, 번영 복음은 근면한 노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상승, 적극적 사고 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아메리칸 드림 자체와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번영 복음 운동은 미국인들에게 '자수성가한 국민의 나라'라는 자부심에 들어맞는 복음만 준 것이 아니었다." 바울러의 말이다. "그것은 개인 경제활동의 기반인 기본 경제구조의 정당성도 확인해주었다." 그리고 번영은 미덕의 증표라는 믿음 또한 강화했다. 이전의 성공 복음처럼 시장을 신뢰했다. "시장이란 성공과 실패로 보상과 처벌을 구분해준다. 유덕한 사람은 풍족한 보상을 받고, 사악한 자는 끝내 파멸할 것이다."[40]

번영 복음의 매력 중 하나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41] 강조하는 데 있다. 이는 성급하면서도 개인에게 힘을 심어주는

관념이다. 신학적으로 이는 구원이 일종의 성취이며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충분한 노력과 믿음만 있다면 부와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매우 능력주의적인 이야기다. 모든 능력주의 윤리처럼, 개인의 책임을 극찬하는 그 개념은 일이 잘되어갈 때는 기꺼워할 만하다. 하지만 반대로 일이 잘못될 때는? 사기를 꺾고 심지어 자책에 시달리게 만든다.

건강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리 건강이 우리 손에 있다는 말처럼 힘이 솟을 말이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아프다면 기도로 나을 수 있고, 병이란 착하게 살고 신을 사랑하면 걸릴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인간 능력을 드높이 띄워버리면, 그만큼 그림자도 짙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병이 들기라도 하면 그것은 단지 불운이 아닌 '병자의 덕 없음'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죽음조차 정신적 피해를 더한다. 바울러는 이렇게 말한다. "신자가 아프거나 죽거나 하면 수치심이 슬픔과 뒤섞인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었는데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42]

번영 복음적 사고의 거친 면은 건강보험 논쟁에서 드러난다.[43] 트럼프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오바마케어를 반대하고 폐기하려 했을 때, 그 대부분은 그들의 시장친화적인 대안이 경쟁은 늘리고 비용은 줄일 것이며 사람들을 기존 방식으로(조건들로)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앨라배마 출신의 보수적인 공화당 하원의원인 모 브룩스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공화당의 계획이 더 건강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악덕이 아닌 미덕만을 계산한 것이다. 삶을 잘 살아간 사람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 높은 보험 요건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보험회사의 시스템은 다만 비용-편익 분석상 타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당하다. 환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것은 '좋은 삶(선한 삶)을 산 사람,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한 사람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정도만 걸어온 사람이 치솟는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다.[44]

브룩스의 주장은 청교도에서 번영 복음으로 이어지는 혹독한 능력주의 논리를 재조명하는 것이다. 만약 번영이 구원의 증표라면 고난은 죄의 증표일 것이다. 이런 논리는 꼭 종교하고만 관련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를 거침없는 의지로 설정하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 운명의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는 모든 윤리 의식에 해당된다.

2009년 오바마케어 논쟁이 한창일 때, 홀푸드Whole Foods 설립자인 존 매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건강보험의 정당성에 대해 비판했다. 그의 주장은 종교와는 무관한 자유방임주의 논리에 기대고 있었다. 그러나 번영 복음 전도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개인의 책임을 꾸준히 강조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일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보험의 문제들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비롯된 것들이다. 미국인의 삼분의 이가 과체중이며 삼분의 일이 비만인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의 대부분, 가령 심장병, 암, 뇌졸중, 당뇨병, 비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건보료 지출액의 70퍼센트에 이른다. 이는 또한 적절한 식습관, 운동, 금연, 적정량의 음주를 비롯한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45]

그의 주장에 따르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다수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탓을 해야 한다. 신앙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다만 과학과 의학의 증거들, 예를 들면 채소와 저지방 위주의 식단이 '고치려면 거액이 드는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종종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려고만 하면 90대까지, 심지어 100세까지 병치레 없이 살 수 있다." 그가 병자는 병에 걸려도 싸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동료 시민들에게 기대려 해서는 안 된다고는 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과 건강에 책임을 진다."[46]

매키에게는 (번영 복음 전도사들이나 마찬가지로) 건강이 곧 미덕의 증표다. 그 미덕이라는 것이 대형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는 것이든 홀푸드의 유기농 식품을 꼬박꼬박 먹는 것이든 말이다.

자유주의적 섭리론

부와 건강을 상과 벌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적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운이나 은총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우리 운명을 책임진다고 여긴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취한 선택과 삶의 태도에 대한 상 또는 벌인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수성가와 자기 통제의 윤리를 확고히 찬양하며, 능력주의적 오만에 빠질 길을 열어준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신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허리케인이든 쓰나미든 나쁜 건강이든 희생자들이 겪는 재난을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희생자들을 업신여기게 된다.

그러한 오만은 번영 복음주의 보수파와 자유지상주의적 복지국가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다. 자유주의, 진보 정치계에서도 두드러진다. 한 예로, 미국의 힘과 번영을 섭리론 냄새가 물씬한 말로 칭송하며 그것은 '성스러운 숙명 또는 의로운 지위'라는 식으로 읊어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이 위대한 까닭, 그것은 미국이 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47] 그녀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썼다. 유권자들에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그의 난폭함이며 졸부 기질하고 맞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선한 것과 위대한 것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 사람이든 나라든 정의로움은 정의로움이고, 부와 권력은 부와 권력이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강대국이 꼭 정의롭지는 않으며,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나라들이 꼭 강력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문구는 이제 우리가 그 섭리론적 전제를 잊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들린다. 이 말은 미국은 세계에서 뭔가 신성한 의무를 띠고 있다는, 말하자면 '하나의 대륙을 정복하거나 세계를 민주주의 실현에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야 할 명백한 운명*을 부여받았다'는 오래 묵은 신념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신

* Manifest Destiny
미국 19세기에 유행한 관념으로, 우월한 백인종이 인디언 등을 굴복시키고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정해준 명백한 운명이라는 의미다. 유럽의 '백인의 사명'과 비슷하며 인종주의적 선민의식을 나타낸다.

성한 의무라는 의식이 퇴조한 지금에도 정치인들은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의 선함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 구호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 이를 처음 사용한 대통령은 아이젠하워다. 그는 이것이 유명한 고전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이 한 말이라고 잘못 인용했다. 1953년 연설에서 아이젠하워는 "미국을 방문한 어느 현명한 프랑스인의 말을 인용한다"면서 "그가 미국의 성공 원인을 알고 싶어 미국에 찾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아이젠하워는 토크빌의 말을 인용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교회를 방문하고 그 설교단이 정의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음을 보기 전까지, 나는 미국의 천재성과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리고 만일 미국이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할 수 없으리라."[48]

사실 이러한 말은 토크빌의 저작에 나오지 않는다.[49] 하지만 후임 대통령들, 특히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에게 이 구호는 계속 인기였다.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아버지와 아들 모두) 대통령들 모두가 이를 한껏 고무적으로 읊었으며 대개 그 청중은 기독교인들이었다.[50] 1984년 '복음주의 교회 성도대회'에서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구호를 그 섭리론적 연원을 분명히 밝히면서 언급했다.

> 우리의 모든 물질적 부와 대외적 영향력은 우리의 신앙심 위에, 그리고 그 신앙에서 비롯되는 기본적 가치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 위대한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미국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 이상 선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위대할 수 없게 되리라"고도 했습니다.[51]

1990년대에는 그들의 언어 표현에 영적인 색채를 입히고 싶어 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이 구호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시절 이 말을 아홉 차례 했다. 존 케리와 힐러리 클린턴은 각자의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이 말을 거론했다.[52]

역사의 옳은 편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주장은 밝고 기운찬 아이디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허리케인이 죄의 대가'라는 어두움이 있다. 그것은 능력주의 신념을 국가에 적용한 것이다. 오랜 섭리론 전통에 따르면 세속적 성공은 구원의, 또는 세속의 언어로는 선함의 증표가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미국의 역사적 역할을 해석하는 일은 진보파에 있어 모험이다.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미덕 덕분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부유하고 강력한 시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많은 진보파와 자유주의자들, 특히 평등 문제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일 만해서 부자라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들은 그런 주장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려 부자들에게 과세하는 일에 딴지를 거는 편협한 도덕론이라고 본다. 풍요는 도덕적 우위의 표지라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평등지향적 진보파들은 운의 우연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시장 사회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인성과 미덕만이

아니라 운과 상황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여러 요인들 중에는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인 것들이 많다.

그러나 강대국은 선해서 위대하다는 도덕론적이고 섭리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내면서 동시에 부유한 개인은 자신의 미덕으로 부유해진 거라는 도덕론적, 능력주의적 아이디어를 밀어내기란 쉽지가 않다. 국가들 가운데 일정한 도덕적 특권을 인정한다면, 같은 논리가 '1퍼센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도덕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대외적 섭리론과 대내적 능력주의는 함께 서든지 함께 무너지든지 해야 한다.

비록 최근 수십 년간 정치인들이 이런 긴장을 뚜렷이 인식하지는 못했으나, 이를 국내외에서 능력주의적 사고를 도입해 풀어보려고 조금씩 시도하고 있다. '선량하니까 위대하다'는 섭리론에 내포된 능력주의적 색채는 사회적 단결, 개인의 책임, 복지국가 등에 대한 국내적 논쟁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진보파들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적인 비판을 점점 더 많이 수용해갔다. 그 가운데는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는 개념도 있었다. 비록 그들이 모든 건강과 부를 개인의 덕행으로 돌린다는 식으로까지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미국의 빌 클린턴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같은 정치인들은 개인 책임과 수혜자들의 자격을 더 밀접하게 엮는 식으로 복지 제도를 고쳤다.[53]

오늘날 자유주의 진영의 섭리론적 태도는 국내외 정책을 모두 건드리는 또 다른 언어 표현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동맹자를 변호하며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다"고 하고, 그 비판자들에 대해서는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아마도 역사의 '옳은 편'이니 '잘못된 편'이니 하는 논쟁은 냉전이

한창일 때 공산주의 초강대국과 반공 초강대국이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자신들의 체제만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변할 때를 상기시킨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표현을 냉전기 논쟁의 맥락에서 사용한 미국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54]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역사의 옳은 편과 잘못된 편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논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논쟁은 대체로 민주당 사람들이 주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문구를 딱 한 번만 언급했다. 2005년 미국 군인들 앞에서의 연설에서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으니까요"라고 했을 때였다. 그는 덧붙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 덕분에 자유의 물결이 중동 전역에서 넘치고 있다"고도 했다. 1년 뒤 리처드 체니 부통령은 항공모함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을 옹호하며 미군의 활동을 이렇게 정당화했다. "우리의 동기는 불가피했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정의로웠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습니다."[55]

그러나 대체로 이런 승리주의적 표현은 민주당 대통령들이 즐겨 썼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재직 중 25번이나 썼고, 버락 오바마는 무려 32번이나 썼다.[56] 때때로 오바마는 급진적 이슬람 테러를 두고 부시나 체니의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투로 이야기했다. "알카에다와 그 동조자들은 잘못된 역사의 편에 서 있는 왜소한 인간들입니다." 오바마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와 미국 공군 사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이슬람 국가 테러리스트들은 미국이나 우리의 생활방식을 파괴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우리야말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57]

클린턴과 오바마는 이 승리주의적 언어 표현을 다른 맥락으로 썼다. 이는 그들의 신념을 반영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소련의 몰락 이후 역사는 의심할 수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이어져 왔다는 신념이었다. 1994년 클린턴은 러시아 최초의 민주적 선출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의 장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소유자다. 그는 역사의 옳은 쪽에 서 있다." 이슬람권에서의 민주주의 봉기 상황을 보면서 오바마는 취임 연설에서 독재자들과 폭군들에 대해 엄한 경고를 날렸다. "부패와 기만, 반대파에 대한 억압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음을."[58]

2009년에 이란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폭압적 정부에 반대 시위를 했을 때, 오바마는 그들을 추켜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의 옳은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이 '민주주의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권위주의를 대신할 것'이라는 희망을 북돋웠을 때도 오바마는 역사를 들먹였다. 그는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역사의 잘못된 쪽에 있다"며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는 걸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의 행정부가 이집트 타리르 광장에 모여든 민주주의 시위자들을 암암리에 지지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바마는 대답했다. "저는 이집트에서의 상황이 역사에 남김없이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습니다."[59]

역사가 되기도 전에 역사를 들먹이는 일,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일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갈 거라고 하는 예측은 고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담 후세인을 몰아내었지만 중동에 자유민주

주의가 자리 잡지는 않았다. 아랍의 봄에 품었던 희망조차 얼마 있지 않아 새로운 독재와 탄압의 겨울로 바뀌어버렸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를 보면, 옐친 치하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리라 믿었던 희망이 참으로 덧없이 느껴진다.

둘째, 역사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이 곧 도덕적 정당화의 기반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옐친이 아닌 푸틴이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적어도 그가 러시아를 독재적으로 통치하면서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을 보자면 말이다. 시리아에서는 폭압적 통치자인 바샤르 알 아사드가 치열한 내전을 거치고도 건재했으며, 그런 점에서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던 셈이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정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도덕 세계의 궤적

스스로의 목적에 대해 "나는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다"며 옹호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역사의 긴 맥락을 보고 있다고 답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답변은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설령 속도가 아주 느릴지언정 역사는 정의를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역사의 옳은 편을 운운하는 가운데 섭리론을 부여한다. 이는 역사가 신의 손에 따라서 또는 세속적인 도덕 진보와 발전을 향해서 움직여간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버락 오바마는 그런 믿음을 가졌고 종종 표현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의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인용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다. 그러나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 그가 얼마나 이 말을 좋아했는가 하면, 대통령이 된 뒤 연설과 선언에서 33차례 인용했으며 집무실의 양탄자에 새겨 넣기까지 했다.[60]

이 섭리론에 대한 믿음은 역사의 옳은 편과 잘못된 편 이야기에 도덕적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미국(또는 다른 어떤 나라라도)이 선하기에 위대하다는 주장도 뒷받침한다. 어떤 나라라도 신의 일을 하기만 하면, 또는 자유와 정의로 뻗은 역사의 행진에 앞장서기만 하면 그 위대함이 선함의 증표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일과 목표가 신의 계획에 연계되어 있다고, 또는 역사 속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행진과 함께한다고 믿으면 큰 희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마틴 루터 킹의 가르침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민권 시위대에게 흑백 분리주의자들의 폭력적 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위할 힘을 주었다. 킹은 이 기억될 만한 문구를 19세기 매사추세츠 주에서 노예제 폐지운동을 벌였던 시어도어 파커 목사의 설교에서 가져왔다. 킹의 것보다 덜 단순했던 파커의 문구는 섭리론 신학이 어떻게 피억압자들의 희망을 샘솟게 하는지 보여준다.

> 세상의 진실을 바라보세요. 정의가 계속해서 또 크게 승리하고 있음이 보일 겁니다. 저는 도덕 세계를 이해하는 체 하지 않습니다. 그 궤적은 길지만 저의 눈은 조금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으로 그 곡면을 계산해 내고 궤적을 완전히 그려낼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양심을 통해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을 통해 그것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오랫동안 잘못된 채로 남지 않습니다. 제퍼슨은 노예제도를 생각했을 때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의 정의로우심을 기억했습니다. 머지않아 미국 전체가 떨 것입니다.[61]

킹과 파커의 입을 통해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는 믿음은 부정의에 맞선 싸움을 위한 크고 예언자적인 외침이 되었다. 그러나 똑같은 섭리론 믿음이 약자들에게는 희망을, 강자들에게는 오만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자유주의의 감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민권의 도덕적 긴급성에 대한 감각이 냉전 이후 자족적인 승리주의 감각으로 바뀌어 버렸다.

소련의 몰락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많은 서구인들은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자본주의로의 행로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런 가정에 힘입어 그들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비전을 실천에 옮겼다. 자유무역협정, 금융 규제 철폐를 비롯한 재화, 자본, 사람의 국가 간 흐름을 쉽게 하는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가 글로벌 상호의존성을 높일 것이며, 국가 간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고 민족주의 정체성이 완화되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높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글로벌 경제와 새로운 IT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심지어 권위주의적 정권의 힘을 빼고 그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인도하기까지 하리라 여겨졌다.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세계화 프로젝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몰고 왔으며, 8년 뒤에는 격렬한 정치적 반동을 일으켰다. 민족주의

와 권위주의는 사라지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힘을 얻었고, 민주 사회들에서도 자유주의적 제도와 규범을 위협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시장친화적 세계화가 유력해질 때 이를 추진했던 엘리트들은 역사의 진행 방향을 의심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역사의 옳은 편"이라는 표현의 사용량은 급증하여, 구글에서 찾아보면 책 여덟 권 분량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62]

세계화 지지자들은 역사가 자기네 편이라고 굳게 믿었다. 빌 클린턴은 1993년에 의회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지지하도록 설득하며, 이 협정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망을 위협하리라는 우려를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자신이 가장 우려한 부분은 'NAFTA가 무산되면 세계화에 문제가 생기리라'는 것이었다. "제가 걱정하는 일은 이로써 미국이 역사의 잘못된 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로 나갈 때 말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1998년 베를린에 방문한 클린턴은 "글로벌 경제로의 어려운 이행을 해낸 것"에 대해 독일을 찬양했다. 비록 많은 독일인들은 "그 혜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독일이 세계화를 수용함으로써 "분명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63]

진보파들에게 역사의 옳은 편에 서는 일은 자유시장경제의 고삐를 완전히 푸는 일까지 포함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외부에서는 글로벌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내부에서는 차별 철폐와 공평한 기회의 확대를 위해 애써야 한다는 뜻이었다. 건강보험 개혁, 가족의료 휴가법*, 대학 등록금 관련 세액 공제,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성소수자LGBT 차별을 금

지하는 행정명령 등등은 클린턴과 오바마가 종종 "역사의 옳은 편"이라는 문구와 함께 추진한 일들이었다. 클린턴은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오바마를 후보로 인준하며, 그가 군 통수권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며 경험이 부족하다고 공화당에서 비난함에도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를 떠올렸다. "1992년에는 그런 비난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2008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역사의 옳은 편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64]

* 97p. 하단
The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1993년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해 이뤄진 연방법규. 노동자 자신이나 가족이 의료문제 등 중대한 가정 문제를 만났을 때 고용주가 그를 해고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주지 않고 무급휴가를 주도록 한 내용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에서 이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그 당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한껏 심화시키고 있었고 경제는 금융에 지배받고 있었으며, 정치는 시민보다 돈의 힘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었다. 또한 분노한 민족주의가 밀물처럼 일어나고, 기회 평등을 개선하려는 프로젝트는 당시 유명무실한, 대선 과정에서의 값싼 말잔치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오바마가 도덕 세계의 궤적이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했을 때, 그는 마틴 루터 킹은 말하지 않았던 확언을 덧붙였다. "결국 미국은 옳은 길로 갔습니다."[65] 그러나 그 덧붙임 때문에 킹의 메시지는 본래의 정신과 어긋나 버렸다.

시간이 가면서 오바마의 섭리론은 변화를 위한 예언자적 외침이라기보다 일종의 정당한 휴식, 미국 예외주의를 부추기는 재확언에 가까워

졌다. "진보란 언제나 일직선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는 2012년 캘리포니아 주 베벌리힐스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정치사회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있고, 일부 사람들이 미처 챙겨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예외적인 까닭이 뭐냐 하면, 결국 옳은 길로 간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도덕 세계의 궤적은 길지만 반드시 정의를 향해 휘어진다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별해집니다."[66]

1895년, 웰슬리 대학 교수이자 사회개혁가였던 캐서린 리 베이츠는 애국주의적인 시, 〈아름다운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 발표했다. 15년 뒤 교회 오르간 연주자였던 어떤 사람이 여기에 곡을 붙였다. 미국의 선함에 대한 송가라고 할 이 노래는 미국을 사랑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곡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곡을 국가로 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다.[67]

미국 공식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와 달리 〈아름다운 미국〉은 평화주의적 송가다. 이는 "로켓은 붉은 섬광을 뿌리고, 폭탄은 공중에서 작렬하네"*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자줏빛 산의 위엄"을 노래한다. 이 노래의 후렴구는 신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다.

미국이여! 미국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
그대의 형제에게 보인 선행에

* **로켓은 붉은 섬광을 뿌리고, 폭탄은 공중에서 작렬하네**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의 일부 가사다.

이 바다에서 빛나는 저 바다까지

왕관으로 송축되기를![68]

그러나 신의 은총을 언급하는 가사는 종종 두 가지로 해석되었다. 기원문으로서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시기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과거형 즉 사실에 대한 묘사로 해석되기도 했다.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도다."[69]

나머지 가사에서 유추하면 원작자인 시인은 첫 번째 의미로 썼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은총을 바라는 기도문인 것이다. 바로 다음 가사가 이를 분명히 한다. 신이 그대의 형제에게 보인 선행에 "왕관을 내렸다crowned"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crown 바라고만 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두 번째 해석을 따랐고,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도다"라고 기정사실화했다. 이는 미국 섭리론이 한 줄기 염원보다는 확언의 성향을 더 띤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신의 은총은 무조건적인 선물이 아니며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 사실상 우리 힘으로 성취한 것이다. "미국은 선하며, 따라서 위대하다."

능력과 은총 사이의 균형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청교도들에서부터 번영 복음 전도자들까지, 성취의 윤리학은 거의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유혹이었고 언제나 보다 겸손한 희망과 기도의 윤리학, 수혜와 감사의 윤리학을 압도했다. 능력주의는 우리의 은총을 추동하거나 그 자체의 이미지로 개조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1년 10월 28일, 9.11 테러가 있은 지 겨우 몇 주가 지난 시점에

전설적인 흑인 미국 소울 가수이자 음악가인 레이 찰스는 월드 시리즈 야구경기 제2차전 개막식에서 〈아름다운 미국〉을 전자기타 판으로 편곡해서 불렀다. 찰스는 그 곡을 어느 누구와도 다르게 삶의 비통함과 고통 끝에 얻은 구원의 희열을 절절히 담아 열창했다. 그는 언제나 그랬듯 반복 악절을 덧붙여 그의 청중들이 미국의 은총이란 결코 단순한 희망이나 기도가 아니라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끔 불렀다.

미국이여! 미국이여!
신께서 그대에게 은총을 내리셨네. 오 예, 그러셨다네.
그리고 왕관을 내리셨네. 그대여, 혹시 잊지 않았는가?
이 바다에서 빛나는 저 바다까지
그대의 형제를 구한 선행의 보답이라네.[70]

그가 부르는 마지막 가사가 스타디움에 울려 퍼질 때, 넉 대의 F-16 전투기가 상공을 비행했다. 찰스의 노래가 담고 있던 애절함과 비통함은 더 강하고 덜 관대한 굉음에 묻혔다. 여기에 섭리론적 믿음에 대한 확신의 모습이 존재했다. 도덕 세계의 궤적은 정의를 향해 휘어질지도 모르나,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CHAPTER 3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THE RHETORIC OF RISING

-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 시장과 능력
- 자기 책임의 담론
-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 포퓰리즘의 반격
-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 보는 것과 믿는 것

3

THE RHETORIC OF RISING

요즘 우리는 성공을 청교도들이 구원을 바라보던 방식과 비슷하게 본다. 행운이나 은총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분투로 얻은 성과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윤리의 핵심이다. 자유(힘써 일함으로써 내 스스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와 당당한 자격을 한껏 강조한다. 내가 많은 세속적 재화(소득과 재산,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는 데 스스로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취득의 자격'이 있을 것이다. 성공은 미덕의 증표다. 나의 부유함은 나의 몫이다.

이런 식의 사고는 힘을 내게 해준다. 스스로가 자기 운명의 책임자이며 통제 불능의 힘에 몰려가는 희생자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다. 우리 자신을 자수성가하고 자기충족적인 존재로 여길수록, 우리보다 운이 덜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힘들어진다. 내 성공이 순전히 내 덕이라면 그들의 실패도 순전히 그들 탓이 아니겠는가. 이 논리는 능력주의가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는 논

리로 기능한다. 우리 운명이 개인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챙길 필요를 느끼기 힘들다.

지난 40년간 능력주의적 가정은 민주 사회의 공적 삶에 한층 더 파고들었다. 심지어 불평등이 거침없이 확산되는데도, 공적 문화는 우리 각자 '알아서 운명을 책임져라', '스스로 초래한 운명을 받아들여라'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는 마치 세계화의 승자들이 스스로에게 또 다른 모두에게 납득시키려는 말처럼 들린다. 말하자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은 사람과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그럴 만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그들에게 맞는 땅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불공정한 장애물을 치워야 할 것이다. 주류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최근 수십 년간 벌어진 정치 논쟁은 주로 기회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저마다의 노력과 재능으로 사회적 상승을 실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나는 능력주의 정서가 점점 짙어지고 있음을 나의 학생들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쳐온 나는 때때로 학생들에게 해가 지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이 바뀐 건 없는지 묻곤 한다. 보통은 그런 질문에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 교실에서 내가 가르치는 주제(정의론, 시장과 도덕, 신기술의 윤리학) 아래 논쟁을 벌여 보면

학생들의 도덕 및 정치관은 매우 다양했다. 그런 가운데 크게 의견이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19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현상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덕이며,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능력주의적 신념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먼저 나는 이 현상이 학생들의 성장 연령대가 로널드 레이건 시대이고 따라서 당시 유행한 개인주의 철학에 물 들었기 때문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학생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이지 않았다. 능력주의적 직관은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직관이란 대학 입학에서의 소수집단 우대정책과 관련된 토론에서 특히 강하게 불거졌다.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이든 반대하는 학생이든 '나는 죽어라 노력해서 하버드에 왔으며 따라서 나의 지위는 능력으로 정당화된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이 운이나 기타의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입학한 게 아니냐는 말에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쉽게 들어가기 힘든 대학의 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 정서가 팽배해지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스탠포드대는 지원자 가운데 거의 삼분의 일을 입학시키고 있었다. 1980년대 초에는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오분의 일을 입학시켰다. 그러나 2019년 이 두 명문대는 이십분의 일도 입학시키지 않았다.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명문대(그들의 부모가 입학을 열망하는 대학들)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은 가혹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고급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빡빡한 스케줄과 막대한 과제물, 심리적 부담, 사설 입시 컨설턴트와 SAT 과외교사, 체

육특기를 비롯한 특별활동 강사들의 훈육, 그리고 인턴 이수와 해외 봉사점수 따기 등등 목표 대학의 입학담당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온갖 노력들). 이 모든 것이 자기 아이들에게 '최선'을 선물하려는 극성 부모들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다.

이런 과도한 스트레스와 힘겨운 노력을 겪은 뒤에 얻은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며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몫'이라고 여겨지지 않기란 힘든 일이다. 그렇다 해서 학생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공공 봉사나 그 밖의 선행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은 그들을 철저한 능력주의자로 만들었다. 과거 청교도 선배들처럼 그들은 성공이 노력의 산물이라 믿는다.

내가 대학생들 사이에서 능력주의 정서를 느낀 것은 미국에서만이 아니다. 2012년 나는 중국의 남동쪽 해안 지역에 있는 샤먼대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주제는 '시장경제에 대한 도덕적 제한'이었다. 최근의 신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느라 자기 신장을 판 중국 10대 학생 기사[1]를 읽었던 나는 학생들에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뒤이은 토론에서 많은 학생들은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를 나타냈다. 그 10대 학생이 강압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자기 신장을 팔기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에 반대한 일부 학생들은 가난한 사람의 신장을 사서 부자가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은 내게 비공식적으로 답을 주었다. 부를 이룩한 사람은 그만한 능력을 입증한 것이며, 따라서 생명을 연장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후안무치한 능력주의 사고의 응용에 깜짝 놀랐다. 돌이

켜 보면 이런 주장이나 개인의 건강과 부가 신의 은총의 증표라고 하는 번영 복음 신앙이나 도덕적으로 동색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내게 그런 답을 들려준 중국 학생은 아마도 청교도 사상이나 섭리론 전통과는 무관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그의 학우들은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할 때 자라났다.

부유한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내가 중국 방문 때 만났던 학생들의 도덕적 직관, 또한 지난 십여 년간 다수의 중국 대학에서 배양된 도덕적 직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대학생들은 우리 하버드대 학생들처럼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은 사람들이며, 그 경쟁의 배경에는 치열한 시장사회의 경쟁이 있다.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에는 저항하는 한편, 우리는 스스로 성공했고 따라서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재능에 대해 사회체제가 부여하는 보상이 아무리 크든 문제될 게 없다는 생각에는 환호하는 일은 놀랍지 않다.

시장과 능력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덩샤오핑이 중국 시장 개혁을 시작했을 때, 영국의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은 사회가 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다. 이 '시장 신앙'의 시대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 가치와 행동방식이 부흥하도록 길을 열었다.

물론 시장이 반드시 능력주의적 가정에 기댈 필요는 없다. 시장에 대한 가장 친숙한 논증은 효용성과 자유에 대한 것이다. 효용성 담론이란 시장이 GDP를 늘리고 일반적 복지를 극대화할 동기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유 담론이란 시장이 교환하는 재화의 가치를 두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의 시장 승리주의는 제3의 담론 즉 능력주의 담론을 촉발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시스템 위에서 움직인다는 전제 아래, 시장은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준다고 여겨졌다. 모두가 경쟁에서 공평한 기회를 가지는 이상, 시장에서 결과는 능력주의적 보상을 받을 만했다.

능력주의 윤리는 때때로 대처와 레이건의 자유시장 보수주의에도 슬쩍 손을 얹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을 이어 집권한 중도좌파 정권에서 활짝 피어났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도좌파의 정치론이 갖는 특성 때문이었다. 토니 블레어나 빌 클린턴 같은 정치인들은 대처와 레이건이 말한 시장 신앙의 기본 전제를 문제 삼는 대신 받아들였으며, 다만 그 거친 부분을 슬슬 다듬기만 했다.

그들은 시장 메커니즘이 공적 선을 이루는 기본 수단이라는 레이건-대처식 사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해야 함을 분명히 하려고 했다. 인종이나 계층, 종교, 민족, 성별이나 성적 지향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은 시장이 내려준 보상을 누림에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중도좌파 진보주의자들에게 기회의 평등은 단지 차별을 없애는 일 이상을 필요로 했다. 노동시장에서 개인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줄 교육, 보건, 보육 등 여러 서비스 역시 동등

해질 필요가 있었다.

이로써 다시 중도좌파이면서 시장친화적 자유주의인 담론이 1990년대에서 2016년까지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한다. 이는 시장사회에만 맞을 뿐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그 저변에 깔린 원칙들을 실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 원칙이란 공정성과 생산성이었다. 차별을 없애고 기회를 늘리는 일은 시장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 더 많은 재능이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었다. (빌 클린턴은 종종 공정성 담론 밑에 생산성 담론을 깔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2]

그러나 공정성과 생산성을 넘어, 진보주의자들은 제3의 담론도 내놓았다. 그것은 시장에 더 의미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담론이었다. 즉 사람들이 오직 노력과 재능으로만 시장에 성과를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은 능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열화를 이루리라는 것이었다. 기회가 진실로 평등한 사회에서 시장은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합당한 몫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능력과 타당한 자격에 대한 담론은 공적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이런 능력주의로의 전환이 갖는 일부 측면은 그 부정적인 성격을 드러내 준다. 이 측면이란 첫째, 책임을 특히 강조함으로써 복지국가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리스크 부담을 정부와 기업에서 개인으로 옮기려는 태도다.[3] 둘째 측면은 더 야심적이다. 이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언어적 포장'이라 불릴 만한 표현들에서 나타난다. 열심히 일하고 규칙대로 행동하면 누구나 자기 재능과 희망이 허용하는 한 사회적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는 약속 말이다. 개인 책임의 담론과 사회

적 상승의 담론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 논쟁에 불을 붙인 주역이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을 초래했다.

자기 책임의 담론

1980년대와 1990년대, 사회적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담론은 복지국가 관련 논쟁에서 두드러졌다.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은 연대solidarity와 관련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 시민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빚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한 쪽에서는 더 강력한 연대를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보다 제한적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 관련 논쟁의 중점은 연대보다는 '불우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우함에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로 옮아갔다. 한 쪽에서는 개인 책임을 더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보다 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여겼다.

개인 책임을 확대해서 보는 관점은 능력주의 가정이 먹히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 삶에 대해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삶의 결과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하할 소지 또한 커진다.

복지국가에 대한 레이건-대처식 비판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복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따라서 공동체는 단지 자기 책임이라 할 수 없는 불운에 대해서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우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레이건은 언젠가의 연

두 교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복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구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4] 여기서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라는 문구는 그 배경 사상을 잘 보여준다. 마치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만 공동체의 도움을 주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개인 책임론이 그렇듯 여기에도 역시 가혹한 면이 있다. 상황에 따른 희생자이기에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런 곤경을 초래한 자기 책임이 있는 사람은? 논란이 있지만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 대통령 가운데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라는 표현을 처음 쓴 사람은 캘빈 쿨리지, 그리고 허버트 후버였다. 이는 철저히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었다.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병 들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며, 정부 도움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 도중에 사용된 표현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이 표현을 가끔 썼다. 하지만 그의 경우 대공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스스로의 잘못으로 그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도중에 언급된 것이었다.[5]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고 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이 문구를 그의 어떤 선임 대통령들보다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그 후임인 두 사람의 민주당 대통령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는 레이건보다 두 배나 많이 사용했다.[6] 그럼으로써 그들은 레이건처럼 은연중에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가난한 사람과 그런 자격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구분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정부 보조를 받을 만했다. 다만 불우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자격이 없었다.

1992년, 클린턴은 대통령 공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끝내겠다"는 언급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그는 자기 책임의 담론을 사회적 상승의 담론과 연결 지었다. 그리하여 능력주의의 가혹한 면과 야심적인 면을 함께 촉진했다. "우리는 미국이 최선을 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모두에게 그에 따른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나 서로에게 아무 근거 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나쁜 버릇을 없앨 때입니다."[7]

자기 책임의 담론과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이처럼 공통 요소가 있다. 둘 다 자립과 자수성가의 이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자기 책임이란 복지를 기피하고 일자리를 갖는 것이었다. 기회란 교육과 훈련을 받아 노동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기회가 평등하다면 누구나 각자의 노력과 재능에 따라 사회적 상승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은 그들의 능력 정도를 알려 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클린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주어진 과제 즉 신이 부여한 재능과 스스로의 결의에 따라 최대한 사회적 상승을 성취하는 것, 이는 단순히 권리가 아닙니다. 숭고한 책임입니다. 기회와 책임, 이 둘은 함께 갑니다. 어느 한 쪽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8]

클린턴은 복지가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어려운 형편인 사람에게만 제한되어야 한다는 레이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클린턴은 "정부의 역할은,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 그리고 그 자신의 실수가 아닌 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라고 말했

다.[9] 1996년 그는 동료 민주당원들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며 '개인 책임 원칙'을 요구하는 복지제도 개혁법에 서명했다. 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 혜택을 줄 것,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복지 수혜 기간을 일정하게 한정할 것을 내용으로 했다.[10]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와 그것이 갖는 능력주의적 함의는 대서양을 가로질렀다. 클린턴이 개인 책임의 강조를 내세우는 복지제도 개혁법을 승인했을 때, 곧 영국 수상이 될 예정이던 토니 블레어는 비슷한 메시지를 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새로운 복지의 틀을 짜야 합니다. 기회와 책임이 함께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레어는 자신의 정치는 능력주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저서를 통해 확실히 밝혔다. "새로운 노동당은 능력주의를 당의 노선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은 태생이나 특권에 따른 특혜가 아닌 스스로의 재능에 의해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11]

몇 년 뒤 독일에서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이 비슷한 말을 하며 복지 제도 개혁을 지지했다.

> 이런 수단으로, 우리는 우리의 복지국가를 세계화 폭풍에 맞설 수 있도록 개조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점에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개인 책임도 늘려야 하며, 우리 자녀가 얻을 기회를 위한 공동의 책임도 늘려야 합니다. 사회정책적으로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회를 잡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12]

자기 책임의 담론은 이제 하도 익숙해져서 지난 수십 년간 그것이 띠었던 의미와, 여기에 연결된 능력주의적 성공론을 간과하기 쉽다. 정치 지도자들은 오래 전부터 책임에 대해 거론해왔고, 전형적으로는 시민 개인이 그 나라와 동료 시민들에게 갖는 책임을 들먹였다. 그러나 야스차 뭉크의 지적처럼, 이제 책임이란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이자, 그렇게 못할 경우 겪게 될 고난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이제 책임을 면해줄 방파제로서 충분하지 않으며, 전보다 더욱 개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잘못된 행동이 아닌, 운이 나쁜 탓에 곤경에 놓인 사람에게만 복지 수혜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각자 능력대로 대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13]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사회적 상승의 담론 역시 새로운 형태를 취하다 보니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평등한 기회와 사회적 상향 이동 보장이라는 이상은 오래 전부터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였다. 그 밖의 나라에서도 그런 이상은 추구되어 왔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출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거의 케케묵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숙하다. 즉 거의 이의가 없는 담론이다. 주류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이 담론을 들먹인다. 그리고 누구의 비판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구호가 꽤나 최근에 나온 것임을 알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정치 담론장에서 그것이 두드러진 지는 겨우 40년을 넘지

않는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 구호를 정치 담론으로 뚜렷이 제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다. 백악관 브리핑 도중 그는 행정부의 흑인 구성원을 언급하면서 능력과 사회적 상승의 연관성을 명백히 짚었다. "모든 미국인은 개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꿈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뻗어갈 수 있어야 마땅하다." 레이건에게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단지 차별을 극복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이를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 있었는데, 가령 감세 논쟁에서 그랬다. "감세는 모든 미국인이 각자의 노력, 기술, 상상, 창조성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장애물을 없애줄 것이다."[14]

빌 클린턴은 레이건의 구호를 받아들이고 자주 써먹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다는 아메리칸 드림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상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규칙을 지키며 행동한다면 신이 주신 능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뻗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사회적 상승 담론은 양당제의 틀에서 너끈히 자리 잡았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존 매케인, 마코 루비오는 모두 이를 열렬히 주장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처럼 이 담론에 애착을 가진 미국 대통령은 달리 없었다. 그가 이를 언급한 횟수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이 언급한 횟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그의 대통령 임기의 핵심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15]

'고등교육 문제에 있어' 오바마는 백악관에 교육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명석하고 동기부여가 잘 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재능이 그리고 그들의 직업윤리와 꿈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 교육을 사회적 상

승의 기본 수단으로 여겼다. "이제 한 국가로서 우리는 평등한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성공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누구든, 무엇을 좋아하든, 어디 출신이든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이 줄 수 있는 근본적 약속입니다. 어디서 출발했는지가 어디에 닿을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기쁠 것입니다."[16]

다른 곳에서 오바마는 영부인 미셸을 예로 들었다. 그녀는 노동자 집안에서 자랐으나 프린스턴대와 하버드 로스쿨에 다녔고 그래서 사회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미셸과 그녀의 오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꿈의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오바마의 신념을 뒷받침했다. "미국을 그토록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미국인을 이토록 독특하게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계약에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어디서 온 사람이든 성씨가 뭐든 어떤 실패를 겪었든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17]

오바마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레이건과 클린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능력주의를 지향했다. 비차별을 강조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주장하고, "개인이 각자 책임을 지라"고 시민들에게 훈계했다. 따라서 여기서 사회적 상승 담론과 능력주의 윤리가 한 데 엮인다.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출세할 수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 자신이 일궈낸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이 뚜렷해짐에 따라 능력과 정당한 자격에 대한 사회적 거론도 많아졌다. 미국인이라면 1970~1980년대 내내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던 맥도날드의 광고가 있다. 맞벌이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은 오늘 쉴 자격이 있어요"라고 하는 광고다. 책과 신문의 경우를 보자. 책에서 어떤 단어나 구절이 쓰인 빈도를 찾아주는 구글 엔그램에 따르면 "자격이 있다you deserve"는 말의 쓰임은 1970년에서 2008년 사이 세 배로 늘었다. 〈뉴욕타임스〉에서 "자격이 있다"란 말은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했던 해에 비해 2018년에 네 배 많이 사용되었다.[18]

일부 자격 담론은 노골적으로 능력주의 사고와 닿아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뉴욕타임스〉의 기사 하나를 보면 "동기부여 녹음테이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인다. 파도 소리를 배경음으로 최면을 거는 듯한 메시지를 중얼거리는 녹음테이프인데, 가령 이런 메시지다. "난 아빠보다 더 잘나갈 자격이 있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목표를 이룰 자격이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러나 자격 담론이 대중문화에 녹아들면서 그 내용은 더 고무적이면서 무조건 성공을 약속하는 형태가 되었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요리 레시피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말이다. "여러분은 더 맛있는 치킨을 만들 자격이 있어요(여러분이 만들 자격이 있는 이 부드러운 치킨을 어떤 비법으로 만드냐고요? 지나치게 굽지만 않으면 돼요)."[19]

능력과 자격 담론이 일상생활에서 두드러지고 있을 때, 철학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1960~1970년대에 영미권 주요 철학자들은 능

력주의를 배격했다. 시장에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가령 그의 재능에 대한 수요나 그 재능의 희귀성 정도)에 따르기 마련이라는 근거에서였다. 그러나 1980~1990년대가 되자 영향력 있는 철학자 집단, 당시 정치계를 풍미하던 '자기 책임의 담론'을 반영하는 집단이 다시 능력주의를 들고 나왔다. '행운 평등주의자Luck Egalitarians'라 불렸던 그들은 사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의무를 따질 때, 자신의 불운에 책임져야 할 사람과 단지 운이 없었던 사람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자신의 곤경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20]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능력과 자격 담론이 사회적 상승 담론과 짝을 이루었다. 1960~1970년대 미국 대통령들은 자격 운운하면서 청중들을 자극하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케네디는 "자격이 있다"는 말 자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레이건 때부터 바뀌었다. 그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그의 전임자들이 쓴 것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썼다.[21] 가령 1983년에 있었던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만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은 시기와 분노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나 믿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맙소사!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보상을 받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노력이 미국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22]

레이건 이후 "자격이 있다"는 말은 당파를 불문하고 대통령들의 상투적 문구가 되었다. 클린턴은 이 말을 레이건보다 두 배 더 썼다. 오바마는 세 배였다. 그 맥락은 일상적인 언급에서부터 의미심장한 발언까지 두루 걸쳐 있었다. 클린턴은 국방부 산하 센터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한 도시에서 연설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오바마는 도매상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한 이상 그에 마땅한 급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개방대학에서 연설할 때 오바마는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옹호하며 말했다. "여러분은 세금 우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23]

영국에서는 1990년대 토니 블레어에 의해 제창된 능력주의 신념이 계속 영국 정치를 휘어잡았다. 심지어 브렉시트 국민투표 뒤에도 말이다. 2010년 수상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테레사 메이는 '영국을 진정으로 능력주의화하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보통 사람들, 노동계급'을 그 주인공이라 했다. 그녀는 "그들은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제시한 더 나은 조건이란 바로 능력주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다.[24]

> 저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능력주의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이 특권이 아닌 능력에 따라 위로 올라설 수 있는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재능과 노력만이 중요하며, 태어난 집안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악센트의 영어를 쓰는

지는 전혀 상관없어지기를 바랍니다.[25]

사실 사회적 상승과 자격에 대한 그들의 담론이 어떻든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노골적으로 능력주의를 거론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오바마는 예외였다. 가령 그는 ESPN의 스포츠 해설자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끌리는 이유에 대해 "그것이 진정으로 능력주의적인 몇 안 되는 경우기 때문이겠죠. 여기엔 '대충 어떻게든 된다'는 게 거의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지든, 누가 잘하고 못하든 모두 철저한 기준에 따라 판명됩니다"[26]라고 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사회적 상승과 자격에 관한 담론을 끊임없이 거론했다. "우리의 유세는 근본적 신념을 재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미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사람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아무 상관없이 노력과 꿈이 허용하는 한 나아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선되면 "여러분이 얻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느 선거운동 집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참된 능력주의가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불평등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27]

포퓰리즘의 반격

힐러리 클린턴의 불운이랄까. 사회적 상승에 관한 담론은 2016년 그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그녀를 누른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사회적 상승에 대한 이야기나, 미국인이라면 누구나 재능과 노력이 허용하는 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 이 구호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일절 안 했다. 대신 그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거친 발언을 내놓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위대함의 비전은, 지난 40년간 미국에서 활발한 공적 담론을 일으켰던 능력주의적 기획과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능력주의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적 반감이 트럼프 당선과 그 해 초 영국에서 예상을 깨고 이루어진 브렉시트 표결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 선거는 복합적 이벤트이므로 어떤 일이 투표자의 표를 이끌어냈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트럼프와 브렉시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포퓰리스트 정당들에 표를 던진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은 사회적 상승에 대한 약속보다는 국민 주권 원칙의 재확인, 국가 정체성과 국가적 자존심 등의 강조에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주도적 세계화를 환영하면서 그 이익 대부분을 챙기고 노동자들을 외국 노동자들과의 경쟁에 내몬 장본인들, 동료 시민들보다는 세계 각지의 엘리트들과 더 가까워 보이는 능력주의 엘리트, 전문가, 전문직업인 계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기존 질서에 대한 포퓰리즘적 증오가 꼭 능력주의적 오만에만 맞춰

진 것은 아니었다. 외국인혐오증, 인종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적대감 등도 한몫했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반격에 있어 적어도 일부는 능력주의 위계질서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는 자들이 그들보다 덜 성공한 자들을 깔보고 있다는 인식에서 촉발되었다. 이런 포퓰리스트들의 불만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수십 년간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능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주문을 외워댔다. 그들은 바닥에 묶여 있는 사람들 또는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사정을 챙기지 못했다. 사회적 상승의 담론은 그런 이들에게 있어 약속이라기보다는 조롱이었다.

이것이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의 능력주의 주문을 듣고 느낀 것일 수 있다. 그들에게 사회적 상승 담론은 신이 나기보다는 성이 나는 말장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능력주의 신념을 저버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능력주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건 능력주의가 이전까지와 같은 식으로 작동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성취에 대한 장벽을 부수는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끝나지 않은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개입이 인종, 민족적 소수 우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능력주의가 보강되기는커녕 파괴될 거라고 여겼다. 그들은 힘들게 일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는 선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진 시장의 가혹한 판결을 감내했으며, 도덕적·심리적으로 그 판결 결과를 지키려 했다.

2016년 대선 뒤 시행된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자와 반대

자들에게 지금의 미국이 얼마나 능력주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가령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는 공평하고 공정하다", "경제적 상승의 기회는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상 모두에게 열려 있다", "우리 사회는 백인 미국인과 인종, 민족적 소수 미국인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갖는 수준에 이르렀다" 등의 명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28] 부유한 응답자들이 불우한 경제적 조건의 응답자들보다 이런 명제들에 더 긍정적이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계층에 상관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지지자들에 비해 이런 명제들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29] 트럼프 지지자들은 진보파의 사회적 상승 담론에 짜증을 냈는데, 그것은 그들이 능력주의를 배격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다만 그것이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귀결되리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났던 것이었다. 그들은 그런 담론의 원칙에는 공감했고 각자의 능력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에 동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능력주의의 폭정은 사회적 상승의 담론 그 이상의 것들에서 비롯된다. 이는 여러 가지의 태도와 상황을 포괄한다. 그런 많은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능력주의를 유해하게 만든다. 첫째, 노골적인 불평등이 이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가로막힌 상황에서는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책임자이며, 우리가 얻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라는 메시지가 사회적 연대를 약화하며,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의 사기를 꺾는다. 두 번째, 대학 학위가 그럴 듯한 일자리를 얻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주장은 '학력주의 편견'을 조성하며, 그로써 노동의 명예를 줄이고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위신을 떨어트린

다. 셋째,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고도의 교육을 받고 가치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잘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를 타락시키고 일반 시민의 정치권력을 거세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정치인들이 제대로 먹히지도 않는 공허한 말을 지겹도록 반복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심증이 가게 마련이다. 바로 사회적 상승 담론이 여기에 들어맞는다. 불평등이 위험수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러한 담론이 가장 구역질나게 들렸음은 우연이 아니다. 가장 부유한 1퍼센트가 전체 인구의 50퍼센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으며[30] 중위 소득이 40년 동안 줄곧 제자리걸음만 한 상황에서,[31]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성공한다'는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을 리 있겠는가.

이러한 빈말은 두 종류의 불만을 낳았다. 하나는 체제가 능력주의적 약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만으로,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일한 사람도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빚어졌다. 또 다른 불만은 능력주의적 약속이 이미 지켜졌고, 자신들은 볼 장 다 봤다는 절망에서 우러났다. 후자가 더욱 사기를 떨어트리는 불만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뒤처졌으며 그 잘못은 순전히 자신들에게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미국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자기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 있다'는 믿음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다. 국제 공공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77퍼센트)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믿는다. 독일인의 경우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대답했다.[32]

"앞서가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란 질문에, 미국인들 대다수(73퍼센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프로테스탄트 직업윤리가 굳건히 버티고 있는 셈이다. 독일에서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성공의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에 불과했다.[33]

이러한 조사에서 으레 그렇듯 응답 성향은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일과 성공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했을 때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을 덜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가 부자인 까닭은 남보다 열심히 일해서일까, 살다 보니 운이 좋아서일까"라는 질문에서는 미국인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할까"라는 질문에는 다수의 미국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 탓이라고 대답했다. 겨우 열 명 중 세 명이 노력 부족을 가난의 원인으로 들었다.[34]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재자이며, 앞날은 스스로의 손에 달려 있다'는 보다 범위가 큰 믿음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인은 다른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보다 인간의 자수성가 능력을 더 많이 믿는다. 과반수의 미국인(57퍼센트)이 "인생 성공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더 많이 좌우된다"는 말에 반대한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타 국가 국민들

과반수는 성공이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변수에 따라 주로 결정된다고 본다.[35]

일과 자기구제에 대한 이런 입장은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에 대한 입장에도 영향을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공하리라 믿어도 되고, 실패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탓해야 하는 게 옳다면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이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의 혹독한 면이다.

오직 자기 외에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말할 사람이 없다면 최고의 자리에 서는 사람과 최저의 자리에 서는 사람 각자의 사회적 위치가 정당화된다. 부자는 부자일 만해서 부자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가장 잘나가는 사회구성원이 자기 이외의 요인, 가령 행운이나 신의 은총이나 공동체의 지원 덕분에 그 자리에 섰다면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의 운명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은 힘을 얻는다. 우리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굳건한 미국은 사회민주주의 유럽보다 덜 관대한 복지국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삶이 자기 통제 밖의 변수에 더 많이 휘둘린다고 생각한다. 노력하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면, 정부는 '일자리와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그만일 것이다. 미국의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 정치인들은 현재 정책이 기회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느냐에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정책의 목표가 '출발점이 어디든 모든 이에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사회적 이동

성이 불평등의 해답이라고 본다. 따라서 상승에 성공한 사람은 그 결과물을 오롯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노력과 근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미국적 믿음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수십 년간 미국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1940년대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거의 전부(90퍼센트)는 부모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1980년대 생은 겨우 절반이 부모보다 많이 벌어들인다.[36]

사회적 상승에 대한 흔한 믿음에 반해, 가난뱅이가 부자 되기도 훨씬 어렵다. 미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이 중산층조차 되지 못한다. 사회적 상승에 대한 연구에선 보통 소득 수준을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가장 하층에서 태어난 사람은 겨우 4~7퍼센트만 최상위층에 도달한다. 그리고 삼분의 일 정도만이 중간층이나 그 이상까지 간다. 정확한 숫자는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아메리칸 드림에서 찬미 받는 '자수성가한 부자'의 삶을 실현하는 미국인은 매우 드물다.[37]

사실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미국에서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부나 가난의 대물림 현상은 독일, 스페인,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보다 미국에서 더 자주 일어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일이 거의 절반에 이르지만,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이동성이 가장 크다)에서는 그 절반 정도일 뿐이다.[38]

밝혀진 대로라면 덴마크와 캐나다의 청소년은 미국 청소년에 비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39] 이런 기준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이 아니라 코펜하겐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볼 일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베이징에서도 살아 숨쉰다.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 하나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보여주었다.

> 내기를 건다고 가정해보자. 열여덟 살짜리 소년이 두 명 있다. 한 사람은 중국에, 다른 한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다. 둘 다 가난하며 장래 상황이 나아질 전망도 어둡다. 자, 둘 중 한 소년을 골라보자. 어느 쪽이 더 사회적으로 출세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
> 독자는 누구를 골랐는가?
>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답은 뻔했다. 어쨌든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서라면 누구든 열심히 일한다면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
> 그러나 오늘날 정답은 당황스럽다. 미국보다 중국이 개인의 생활 향상을 훨씬 빨리 성취해 주고 있는 것이다.[40]

1980년 이후 중국의 예상을 뒤엎은 경제발전을 생각하면 이런 결론이 그다지 놀랍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에서는 부자와 빈자 모두 소득 수준을 개선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소득 수준 개선이 대부분 상류층에 집중되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미국이 아직 중국을 훨씬 앞서고 있지만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은 그 부모 세대보다 부유하다.[41]

더 놀라운 점은 세계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미국과 엇비슷하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중국은 이제 미국보다 세대 간 이동

성 정도가 높다. 이는 기회의 땅이라는 미국이 중국보다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42]

내 학생들이 그 사실을 접했을 때 그들은 웅성거렸다. 대부분은 미국 예외주의를 마음 속 깊이 믿고 있었으며, 미국이야말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앞서갈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향성에 대한 믿음이 미국이 불평등에 대해 줄곧 해온 대답이었다. '그래. 미국이 다른 민주국가들보다 소득 불평등이 클지도 몰라. 하지만 유럽처럼 계층 이동이 어려운 사회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의 의미가 덜하지. 누구든 태어날 때의 계층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니 말이야'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많은 나라보다 더 불평등할 뿐 아니라 이동성도 덜하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과 당황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이동성 지표를 애써 부정하며 "나 때는 말이야. 힘써 노력만 하면…"이라는 식으로 개인 경험에 집착한다. 텍사스 출신의 어느 보수적인 대학생은 자기 경험상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학업에 충실하고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일자리를 얻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전에서 일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말예요." 다른 학생들은 자기들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노력했다고 회상하면서도, 다른 뒷받침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도 인정했다.

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렇게 주장했다. 비록 아메리칸 드림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다. 이러한 신화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재능과 노력이 허

용하는 한 상승할 수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메리칸 드림은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즉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사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플라톤의 경우, '신이 각기 다른 금속으로 영혼을 만들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화는 철인왕이 이끄는 수호자 계급이 나라를 다스릴 때 계급 구분을 정당화하기에 적당했다.[43] 현대 미국의 경우, '아무리 부자와 빈자 사이에 큰 격차가 있더라도 노력만 한다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가 곧 그런 신화가 되는 셈이다.

* Noble Lie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신들이 간통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다는 신화의 내용을 그대로 아동들에게 학습하면 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런 내용을 교육에서 삭제하고 가르쳐야 하며, 이를 "고귀한 거짓말"이라고 불렀다.

내 학생들만 사회적 상승의 전망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다. 연구자들이 미국과 유럽의 시민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각자의 나라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미국과 유럽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현실과 다른 대답을 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정반대로 틀렸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사회적 상승 가능성을 과대평가했고, 유럽인들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44]

보는 것과 믿는 것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세계를 희망과 공포를 통해 바라본다. 언뜻

보면 사람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사회적 이동성 경향에 대해 단지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세상일에 대한 해석에는 잘못된 인식 역시 한 몫 한다는 게 진실이다. 미국보다 더 평등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높은 나라에 사는 유럽인은 사회적 상승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미국인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왜 그럴까?

두 경우 모두 믿음과 신념이 인식을 왜곡했다. 개인 책임을 우선시하는 미국인의 강력한 성향과 불평등을 용인하려는 태도가 '열심히 일하면 사회적 상승이 쉽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개인의 노력이 갖는 힘에 대한 유럽인들의 의심은 불평등을 참아내기 힘들게 했으며, 그와 함께 사회적 상승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도록 했다.

이처럼 각자의 이상과 기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을 생각하면, 능력주의적 약속이 얼마나 노동계급과 중산계급 유권자들의 사기를 꺾고 심지어 굴욕감까지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언뜻 보면 당황스럽기도 하다. 장벽을 없애고 운동장의 기울기를 바로잡고 교육 기회를 더 넓혀 일부 특권층이 아닌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한단 말인가? 교육 균등화, 직업 훈련, 아동 돌봄 등등 자유주의자들과 진보파의 정책들로 혜택을 보는 노동계급과 중산층은 사회적 상승 담론에 이끌려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다. 2016년 노동자들에 대한 세계화의 가혹한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진보 엘리트들의 사회적 상승 담론은 더욱 엄격한 성격을 띠어갔다. 불평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리 운명의 책임자는 우리 자신이며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 하

기 나름"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불평등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 더욱 힘을 실었다. 세계화에 따른 이익을 긁어모은 사람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그 과정에서 뒤떨어진 사람은 그래도 싸다는 믿음이 이로써 한결 굳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 중 하나였던 래리 서머스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점 한 가지는 '진실이 평등화와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모르긴 몰라도 각자 어느 정도 대접받을 만큼 대접받기 마련인 상황에서 비롯됨에 있다."[45]

어쩌면 사회적 상승 담론을 이렇게 옹호할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할 이상적 목표로서 공정한 기회에 따른 경쟁을 제시할 따름이지, 우리 현실을 풀이하는 주장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나 이 담론에서 능력의 비중은 지나치게 커진다. 결국 이상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은 이렇기 마련이라는 주장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사회적 상승 담론이 야심적이며 아직 달성되지 못한 저 너머를 약속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만을 축복하게 된다. "여기 미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출세할 수 있습니다." 호소력 강한 담론이 으레 그렇듯, 야심과 축복을 하나로 뒤섞는다. 희망은 긍정하되 현실에서 그 희망을 이룬 자들에게 한정된 축복을 보내는 것이다.

오바마의 언급은 그런 점에서 되새길 만하다. 2012년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어디서 온 사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기만 한다면 재능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됩니다.You

can make it if you try"[46]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그들의 대통령이 앞으로 이뤄지길 바라는 보다 평등하고 이동성 있는 나라를 제시했다기보다, 현재 미국의 실제 상황을 묘사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일종의 찬사를 했다. 힘써 일하기만 하면 아무 특권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한 미국에 대하여.

그러나 그의 말은 찬사에서 야심으로 넘어갔다. "저는 오늘날 제가 받은 교육 기회로 미국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반드시 이루고자 싸우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누리는 한,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47]

팩트에서 희망으로 넘어가고, 다시 팩트로 넘어가는 이러한 경향은 말실수라거나 철학적 혼동 차원이 아니다. 사회적 상승 담론에 관한 정치적 측면이 특별히 불거져 나온 것이다. 희망과 팩트를 뒤섞는 이런 어법은 승리와 패배의 의미가 뭔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능력주의가 나아갈 이상에 대한 야심을 나타내면, 패배자는 시스템을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능력주의가 주어진 현실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패배자는 스스로를 비난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최근 이러한 요구는 '뭐 하다가 대학 학위도 못 받았느냐'의 형태를 가장 많이 띤다. 능력주의적 오만의 가장 고약한 측면은 학력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CHAPTER 4

최후의 면책적 편견, 학력주의

CREDENTIALISM: THE LAST ACCEPTABLE PREJUDICE

- 무기가 된 대학 간판
-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 최고의 인재들
-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 학력 간 균열
- 기술관료적 담론
-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 기후변화 논란

4

CREDENTIALISM: THE LAST ACCEPTABLE PREJUDICE

오랫동안 마이클 코언은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로 일해 왔다. 2019년 2월, 그는 미국 연방의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옛 보스를 두고 말할 기회를 얻자, 자신이 트럼프를 위해 해야 했던 몇 가지 지저분한 일을 밝혔다. 그 가운데는 트럼프와의 정사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포르노배우에게 돈을 찔러주는 일도 있었다. 증언 도중 코언은 또 다른 트럼프 관련 비리를 실토했는데, 트럼프가 다녔던 대학들과 대학 이사진에게 트럼프의 대학 성적이나 SAT 점수 등을 밝히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이었다.[1]

트럼프는 아마 자신의 대학 성적이 부끄러웠고, 그것이 공개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데 지장이 있으리라(아니면 적어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코언의 언급으로 인해, 트럼프가 자신의 성적을 감추려 했을 때 보인 위선에 이목이 쏠렸다. 2011년, 트럼프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학업 성적을 공개하라고 몰아붙인 바 있었다. "저는

그가 아주 형편없는 학생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형편없었다고요. 어떻게 형편없는 학생이 컬럼비아대에 입학하고, 또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제발 그의 성적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2]

자신이 트럼프의 학점과 SAT 점수 공개를 막으려 일했다는 코언의 폭로는 포르노배우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보다 센세이셔널한 증언에 밀려 충분히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이는 의미심장했다. 학력이 얼마나 공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를 나타내 준 것이다. 2000년대에는 대학 성적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대통령에게 후광을 씌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먹칠을 할 수도 있는 문제로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틀림없이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그는 먼저 오바마의 출생 증명 진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그가 적법한 미국 시민인가를 물고 늘어졌다. 그 시도가 실패하자 그에 버금가는 인신공격성 의혹을 제기했다. 바로 오바마가 능력주의적으로 볼 때 적절한 학력의 소유자냐는 의혹이었다.

무기가 된 대학 간판

트럼프가 거론하는 문제들은 그 자신의 약한 부분을 나타냈다. 대선 유세 기간과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트럼프는 자신의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고 여러 차례 자랑했다. 대통령의 사용 어휘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며, 그것은 지난 100년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의 국무장

관조차 트럼프를 "얼간이"라 불렀다고 하며, 국방장관은 트럼프의 세계정세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 5~6학년생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지능에 대한 공격을 받자, 트럼프는 스스로가 "스마트한 사람"이며 사실 "아주 명민한 천재"라고 강변했다. 2016년 대선 유세 때 어떤 외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발언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저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제 뜻대로요. 왜냐면 저는 아주 훌륭한 브레인이고 아주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으니까요. 제 최고 자문역은 제 자신입니다." 그는 자신의 IQ는 높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낮다고 거듭 이야기했다. 특히 흑인들에게 그런 모욕을 일삼았다.[3]

IQ 관련 유전학을 언급하며 트럼프는 자신의 삼촌 하나가 MIT 교수("천재 학자"라 표현했다)였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좋은 유전자, 아주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는 증거"라고 숱하게 말했다. 그의 제1기 내각을 구성한 직후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일찍이 우리처럼 IQ가 높은 사람들로 내각을 이룬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임 다음 날 CIA 직원들을 향한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믿어 주세요. 나는 꽤나 스마트한 사람입니다."[4]

그는 청중들에게 자신의 대학 학위에 대해 끝없이 상기시켜 주고 싶어 했다. 포덤대에서 2년간 있다가 펜실베이니아대로 옮겼고, 그곳의 와튼 스쿨에서 금융학 학사를 마쳤다고 말이다. 그는 자신이 "들어가기 엄청 힘든 대학, 세계 최고의 학교, 대단한 천재라야 다닐 수 있는 학교"[5]를 나왔다고 뻐겼다. 2016 대선 유세에서 그는 반보수로 편향된 언론들이 그의 학력을 자꾸 물고 늘어져 그때마다 변명하는 게 지긋지

긋하다고 불평했다.

제가 진보적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면 그들은 저를 세상에서 가장 스마트한 사람 중 하나라고 보도했을 겁니다. 사실이 그렇죠! 하지만 저는 보수적 공화당 후보예요. 그러니 맙소사, 저들이 어떻게 보도한답니까?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튼 스쿨에 입학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딜 들어갔고, 저길 들어갔고, 이런 걸 했고, 재산을 모았고." 여러분, 제가 왜 늘 학력 타령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강요당하기 때문인 거예요.[6]

스스로 내세운 불리함과 취약함에 비분강개하면서도, 트럼프는 자신이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입이 닳도록 거듭 말했다. 그의 비판자들 눈에는 참 눈물겹고 우스운 말이었겠지만 말이다. 그는 끝까지 이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유세에 참여했던 분노에 찌든 노동계급 지지자들과, 트럼프처럼 엘리트의 능력주의적 오만에 분개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명을 얻었다. 트럼프가 벌이는 짓은 능력주의적 사회가 어떤 굴욕을 안길 수 있는지 되돌아보게 한다. 그는 엘리트를 공격하는 동시에 그들의 존경을 갈구했다. 2017년의 한 집회에서 그는 엘리트를 실컷 욕하더니 잠시 뒤에는 자신이 엘리트라고 주장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엘리트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듣곤 했습니다. 엘리트, 엘리트라! 여러분, 그들이 과연 엘리트라

고 불릴 만할까요? 저는 그들보다 수준이 높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더 크고 더 멋들어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악관에서 살고 있죠. 아주 끝내주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바로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엘리트 축에 못 끼죠.[7]

능력주의적 학력 논쟁에서 방어 자세를 취한 정치인은 트럼프만이 아니다. 1987년 첫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조 바이든은 어느 유권자가 그에게 "어떤 로스쿨을 다녔고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았느냐"고 캐묻자 버럭 성을 냈다.

저는 당신보다 아마도 높은 IQ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학년 장학생으로 로스쿨에 입학했죠. 우리 학년에서 전 학년 장학생은 제가 유일했답니다. 그리고 사실 학년 내 상위 50퍼센트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 학기에는 정치학 분야에서 최우등이었고요. 졸업 때 필요 학점은 123학점이었는데 165학점을 이수하며 3개 학위를 동시 취득했습니다. 자, 우리 마주 앉아서 누구 IQ가 더 높은지 비교해 볼까요? 아주 재미있겠는데요.[8]

바이든의 대답에서 이른바 '팩트 체크'란 과장으로 범벅되어 있다. 그는 불우 학생에게 주는 등록금 부분 면제 장학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의 최종 성적은 동급생들 중 바닥에 가까웠다. 그리고 (복수전공을 시도하긴 했지만) 3개는커녕 1개 학사학위만 겨우 받았다. 그밖에도 과장이 한 둘이 아니다.[9] 그러나 진짜 놀라운 점은 정치인들이 자기 대학 성

적을 부풀린다는 데 있지 않다. 그들이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점에 있다.

자신의 학력에 별 문제 없는 인사까지도 때로는 자기방어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 2018년 트럼프의 미 연방법원 판사 지명자(그리고 결국 인준자) 브렛 캐버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떠올려 보자. 청문회 막바지, 그의 인준이 어떤 여성의 고발 때문에 불투명해졌다. 고교 시절에 캐버노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발이었다. 그가 정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했느냐고 상원의원들이 묻자, 캐버노는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뜬금없이 자기 학력 변호까지 늘어놓았다. 자신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느냐면서 예일대와 예일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것까지 강조했던 것이다.

고교 생활기록부에 음주와 성폭력 건이 기재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저는 우리 학년 수석이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공부했어요. 대학 농구팀 주장이었고요. 예일대에 들어갔고요. 예일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의 제1등 로스쿨이죠. 거기서 저는 오직 공부만 파고 또 팠어요."[10]

문제는 캐버노가 공부를 잘했느냐 여부가 아니었다. 그가 18세 때 술을 마시고 파티에서 소녀에게 성폭력을 가했는지가 주제였지만, 그는 공부 이야기만 거듭했다. 하지만 2018년 당시 학력주의가 하도 만연한 나머지, 학교의 대문을 훨씬 넘어선 곳의 도덕, 정치 논쟁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대학 학력의 무기화, 그것은 능력주의가 얼마나 폭정을 자행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화 시대는 노동계급에게 큰 폭의 불평등 확대를,

또한 임금의 정체를 안겨주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퍼센트는 대부분의 이익을 챙겼고, 하위 50퍼센트는 거의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진보적, 자유주의적 정당들은 이 불평등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외면했다. 대신 그들은 시장 주도적 세계화를 받아들였으며, '기회의 평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통해 불평등한 혜택을 조장했다.

그것이 사회적 상승 담론의 포인트였다. 성공의 길에 놓인 장애물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성공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인종이나 출신 계층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재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회가 정말로 평등하다면 꼭대기에 선 사람은 그 성공과 관련된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 이것이 능력주의의 약속이었다. 더 많은 평등의 약속이 아니라, 더 많고 더 공정한 사회적 이동 가능성의 약속 말이다. 이는 소득 사다리의 단 사이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서로 먼저 사다리에 오르려 경쟁하는 과정에서만 공정함을 추구할 뿐이다. 이런 정치 기획에 별 감흥이 없는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한때 정의와 공동선에 열중했던 정당들이 그런 이야기나 늘어놓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능력주의의 이상이 정의로운 사회에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잠시 접어두고, 여기서 비롯된 성공과 실패에 대한 태도부터 살펴보자.

불평등의 해답은 교육?

능력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사람은,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위해선 차별을 뿌리 뽑는 것 이상이 요구됨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공평한 경쟁을 위한 '운동장 고르기'를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지식기반 ·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결과 1990~2000년대의 주류 정당들은 불평등, 임금 정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해답으로 일단 교육을 내세우게 되었다. "우리가 맞이한 모든 문제들, 모든 도전들을 생각해 봅시다." 1991년 조지 H. W. 부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답은 교육입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1996년 중앙집권적이고 개혁적인 정책 대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감상적 발언을 했다. "제게 물어보십시오. 정부가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세 가지가 뭐냐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이지요. 교육이라고요."[11]

빌 클린턴은 교육의 중요성과 일자리의 연관성에 대해 각운을 살려가며 말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주장으로는 바야흐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 학위가 없는 노동자는 그럴듯한 보수를 주는 그럴듯한 직장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이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 동안 이런 표현을 30번 이상 했다. 그것은 당시의 상식을 반영한 것이며, 두 주요 정당 모두의 환영을 받았다. 공화당 상원의원이던 존 매케인 역시 200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

을 때 이러한 표현을 즐겨 썼다.[12]

버락 오바마도 미국 노동자들이 겪는 경제적 곤경의 해답을 고등교육에서 찾았다. 브루클린의 어느 기술대학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면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13]

> 그냥 고등학교만 다녔어도 공장이나 옷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죠. 또 대학을 나온 사람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은 월급을 받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21세기 글로벌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일자리를 어디서든 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제 베이징에서, 방갈로르에서, 모스크바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과 직접 경쟁합니다. 여러분의 교육 수준이 높지 못하다면 생활에 충분한 임금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울 겁니다.[14]

글로벌 경쟁에 대한 이런 불편한 소식을 전한 오바마는 청중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해답"이라고 확언했다. 그리고 사회적 상승 담론의 보다 활기찬 변형판을 내놓으며 연설을 마쳤다.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뭘 좋아하든 상관없이, 이 나라가 언제나 '하면 된다'는 신념이 이뤄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15]

수십 년간 진보 및 자유주의 정치권의 주된 담론은 이쪽을 맴돌았으

며, 그 끝은 브렉시트, 트럼프, 그 외 포퓰리즘의 반격이었다. 글로벌 경제는 마치 자연법칙에 따르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주된 정치적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재편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에 적응하느냐'였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전망에 주는 악영향을 어떻게 덜어주느냐'였다(엘리트 직업인들은 도리어 혜택을 누리니까 신경 쓸 것 없다).

해답은 이랬다. 노동자의 학력 수준을 높여 그들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회의 평등이 기본적인 도덕적, 정치적 프로젝트 과제였다면 고학력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정책의 제1목표였다.

클린턴-오바마 시대가 끝나갈 무렵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대체로 능력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에 동조했다. 세계화를 수용하고, 대학 학위 취득을 응원하고, 재능 있고 학력이 좋은 사람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갈 만하다고 믿는 것 등등을. 작가이자 MSNBC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크리스토퍼 헤이즈는 최근 좌파가 "능력주의를 더욱 능력주의적이게 하는 이슈(가령 인종차별과 싸우고, 여성 고학력자를 늘리고, 동성애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등)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 증가세를 완화하는 등 능력주의 관심 밖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16]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찾는 시스템 틀 안에서는 교육 시스템의 책임이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불평등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교육

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교육이 이 사회의 다른 죄악들을 사면해주기를 바라며.[17]

포퓰리즘 감각으로 글을 쓰는 작가인 토머스 프랭크는 진보파들이 불평등의 해법으로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시각을 비판했다. "진보파에게 모든 중대한 경제 문제는 사실 교육 문제일 뿐이다. 루저들은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과 학력을 따내지 못한 자들일 따름이다." 프랭크는 이런 식의 불평등 해법이 엉터리이며, 자기충족적 예언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사실 해답도 뭣도 아니다. 일종의 도덕적 판단이다. 스스로의 성공에 취한 승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다. 전문직업인 계층은 그들의 교육 수준에 따라 정의되며, 그들은 입만 열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들에 따르면 불평등이란 시스템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자 개인의 실패일 뿐이다.[18]

프랭크는 이 모든 교육 운운하는 이야기가 불평등을 직접 초래한 정책에서 민주당의 주의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생산성은 1980~1990년대에 증가했으나 임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과연 교육 실패가 불평등의 주원인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진짜 문제는 노동자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으며,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데 있다.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한 것에서 자기 몫을 요구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이 생산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더, 더 많이 챙겨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현실이란 독점산업에서 경제의 금융화, 그리고 노동 관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들은 대신 그런 현실 모두를 방치하게 만드는 도덕적 환상에 젖어 있을 뿐이다."[19]

"스스로의 성공에 취한 승자들이 내린 도덕적 판단"이라는 프랭크의 표현은 뭔가 중요한 점을 꿰뚫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도록 권하는 일은 좋다. 못사는 집 사람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더욱 좋다. 그러나 불평등과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로 노동자가 떠안게 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는 일은 심각한 역효과를 낳는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의 사회적 명망이 추락하는 것이다.

그런 역효과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어느 것이나 노동과 노동계급의 사회적 지위에 악영향을 준다. 첫째, 미국인 대부분은 대학 학위가 없다. 관리자 또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겐 이 사실이 뜻밖일 수 있다. 비록 최근에 대학 졸업자 비율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미국의 성인 세 명 중 한 명 꼴이다.[20] 능력주의 엘리트들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를 대학 학력과 긴밀하게 엮음으로써, 대학 졸업장이 없는 사람이 글로벌 경제에서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이 자업자득이라며 은연중 멸시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대졸자의 임금 수준을 한껏 높이는 정책으로 초래된 문제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제해준다.

둘째,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의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꼴이 된

것이다"라고 말해줌으로써 능력주의자들은 사람을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일에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부지불식간에 학력주의를 조장한다.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에게 고약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학력주의 편견은 능력주의적 오만의 한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에 더욱 물들게 되면서, 엘리트들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버릇마저 들었다. 대학에 가서 자신의 조건을 향상시키라고 노동자들에게 골백번 되풀이하는 말은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도 결국 학력주의를 조장하고 학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과 명망을 훼손한다.

최고의 인재들

오바마는 2000년대 초에 전문직업인들의 상식이 되어 버린 이런 능력주의적 사고의 기수나 다름없었다. 조너선 알터의 글에서처럼, "언젠가부터 오바마는 최고 지위의 전문직업인들은 공정한 '선별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생각에 빠져버렸다. 그 선별 과정은 그와 미셸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도록 해준 과정이기도 하기에, 이는 곧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의 높은 지위를 정당화해주는 것이었다."[21]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해를 다룬 책에서 알터는 "오바마가 지명한 고위직들의 사분의 일이 어떤 식으로든 하버드와 연관이 있고(졸업자이거나, 교수이거나), 90퍼센트 이상은 대학원 학위의 소유자"라고 지적했다. "낭중지추囊中之錐에 대한 오바마의 믿음은 확고하다. 그 자신이

위대한 미국의 전후 능력주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딛고 오른 계층 이동 사다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22]

고급 학력에 대한 선호는 오바마의 임기 내내 이어졌다. 두 번째 임기 중반 무렵, 그의 내각 구성원 중 삼분의 이는 아이비리그 출신이었다. 21명 중 13명은 하버드 또는 예일 졸업자였으며 대학원 학위가 없는 사람은 세 명뿐이었다.[23]

학력이 뛰어난 사람이 정부를 이끈다는 것은 비교적 좋아 보인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노동계급의 생활을 동정적으로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뛰어난 학력과 실천적 지혜 또는 공동선 실현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서로 그다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력주의가 잘못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 하나는 데이비드 할버스탐의 고전적 저작인 《최고의 인재들 *The Best and the Brightest*》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존 F. 케네디가 호화찬란한 학력의 소유자들로 내각을 꾸렸던 사례가 나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뛰어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늪에 뛰어들고 말았다.[24]

알터는 케네디 내각과 오바마 내각의 비슷함에 주목한다. "두 대통령 모두 아이비리그를 나왔으며, 미국인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경멸 섞인 무관심을 갖고 있었다."[25] 결국 오바마의 경제고문들도 늪을 자초했다. 베트남 전쟁보다는 덜 치명적인 늪이었으나, 그럼에도 미국 정치의 형태를 바꿔 버리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 늪이었다. 금융위기를 맞이해 월스트리트의 편을 들어주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은행들이 담보도 없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받도록 했다. 덕분에 민주당은 많

은 노동자들의 눈 밖에 났다. 그리고 트럼프는 백악관에 갈 꽃길을 얻었다.

이런 정치적 판단 착오는 능력주의적 오만과 무관하지 않다. 프랭크는 이를 두고 "민주당 사람들과 월스트리트 사람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던 거대한 능력주의적 특권, 그것은 명문 대학원 학위와 직결되어 있었다"[26]고 설명했다.

> 오바마는 여러 가지 점에서 월스트리트를 높이 평가했다. 투자은행이란 최상급 전문직업의 지위를 표상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정부에 들어찬 성취지향적 인물들의 눈에 투자은행가들은 친구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은 전문직업인 동료였다.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이며, 현학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놀랄 만큼 혁신적인 사람이었다.[27]

프랭크는 "투자은행가에 대한 이러한 자기투영적 존경은 민주당 사람들이 대형 은행의 문제점들을 놓치도록 했다. 그리하여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도, 이 업계를 휩쓸어 버린 사기의 막대한 규모도 파악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 연방 검사로 은행 구제금융 감시관을 맡은 뒤 자신이 본 일에 대해 냉엄한 르포 서적을 쓴 닐 배로프스키를 인용한다. 이 책의 제목과 부제목이 베로프스키의 생각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다. 《구제금융: 워싱턴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구하고 메인스트리트*를 저버렸는가? 그것을 파헤친다 *Bailout: An Inside Account of How Washington Abandoned Main Street While Rescuing Wall*

* Main Street
미국인의 일상생활, 일반 미국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Street》.[28]

월스트리트 간부들이 오바마 선거운동에 거액의 기부를 했음은 사실이지만, 그의 행정부가 금융업계에 관대하게 대한 것은 단지 정치적 보은 때문만은 아니었다. 배로프스키가 지적하듯 더 심층적이고 능력주의적인 풀이가 있는데, 그것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학력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투자은행가들은 그들이 실제로 받는 엄청난 보수가 아깝지 않은 인재들이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었다.

> 월스트리트의 픽션, 즉 '금융업 간부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슈퍼맨들'이며 '어마어마한 봉급과 보너스를 받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의 보배들'이라는 픽션은 재무부 사람들의 뼛속까지 물들이고 있다. 금융 위기가 그들이 벌인 짓이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아무리 드러내 보여도, 재무부 사람들은 한 결 같이 그 헛된 믿음을 지켰다. 어떤 월스트리트 간부가 6,400만 달러의 '잔류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들은 '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에 틀림없어'라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29]

정책 결정에서 작용한 효과를 넘어, 학력주의는 1990~2000년대 민주당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 방식을 윤색했으며, 공적 담론에서 쓰는 용어조차 교묘하게 변형시켰다. 모든 연령대의 정치인과 오피니언 리더들, 홍보 또는 광고업자들은 그들이 퍼뜨리고 싶은 '판단과 평가'의 언어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보통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이분법적 대조를 많이 쓴다. 정의냐 불의냐, 자유냐 부자유냐, 진보냐 퇴보냐,

강력하냐 취약하냐,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등등. 지난 수십 년 동안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우세해지면서 그런 이분법적 가치 대조는 '스마트하냐 우둔하냐Smart vs. Dumb'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

최근까지 '스마트한'이라는 형용사는 주로 사람을 묘사할 때 쓰였다. 미국식 영어에서 누군가를 "스마트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지능을 칭찬하는 의미였다(영국식 영어의 경우 "영리하다clever"를 쓸 것이다).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는 물건에 붙게 되었다. 스마트카, 스마트폰, 스마트밤bomb, 스마트온도조절기, 스마트토스터 등이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가 능력주의 시대와 손을 맞잡게 되자 '스마트하다'는 표현을 통치 방식에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스마트'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다. 가끔 그들이 그 말을 쓸 때는 매번 전통적 의미로 활용했다(가령 "미국 국민은 스마트합니다"). 그러다 조지 H. W. 부시가 이 말을 새로운, 디지털 시대다운 의미로 쓰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카,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웨폰, 스마트 스쿨 등을 종종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언어에서 '스마트'가 폭발적으로 나타난 때는 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때였다. 두 사람 모두 이 단어를 450회 이상 썼다. 그리고 오바마는 900회를 넘겼다.[30]

이런 추세는 일반인들의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책을 보면,

1975년에서 2008년까지 '스마트'는 연간 사용 빈도가 점점 늘어 거의 세 배에 이르게 되었다. '스투핏stupid'은 두 배로 늘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스마트' 사용 빈도가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4배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다시 그 두 배가 되었다.[31]

능력주의적 기준이 대중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서 '스마트'는 점점 더 많이 쓰이고, 그 진짜 의미는 알게 모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는 디지털 기기와 장비를 놓고 부르는 표현만이 아니게 되었다. 점점 더 일반적인 찬사로, 그리고 어떤 정책을 두고 다른 정책과 비교할 때 쓰는 말로 활용되고 있다. 이분법적 가치 비교평가의 '스마트하냐 둔하냐'는 '정의냐 불의냐', '옳으냐 그르냐' 등의 윤리적, 이념적 비교평가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자신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두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 실행해야만 스마트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능력주의가 판을 치는 요즘 이러한 언어 사용 관행은 '윤리적 옳음보다 스마트한 게 백 배 낫다'는 인식을 심을 수 있다.

"전 세계적인 AIDS와의 싸움,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한 일이라 해야 하는 거죠." 클린턴이 미국민에게 보낸 메시지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에서는 어디든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모든 곳의 보건에 위협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방약 관련 혜택을 의료보험에 부가하는 일에 대해선 "단지 해야 할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의료적 차원에서 스마트해지기 위한 일이죠"라고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근로가정을 위해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 스마트한 일입니다"라고 표현했다.[32]

같은 문구를 오바마도 썼다. "여성의 권리 신장은 단지 옳은 일일 뿐이 아닙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이 성공하면 이 나라는 더 안전하고 튼튼하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겁니다." UN 총회 연설에서는 개발 원조에 대해 똑같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옳은 일일 뿐이 아닙니다. 스마트해지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바마는 이민법 개혁부터 실업보험 확대에 이르는 온갖 이슈를 두고 '윤리적이면서 스마트하다'는 주장을 하곤 했다.[33]

"스마트해지기 위해 할 일"이라는 말은 언제나 신중한, 또는 손익계산적인 합리성과 관련되며 도덕적 고려와는 무관하다. 물론 클린턴과 오바마는 도덕적 이야기를 현실적 신중성의 이야기로 뒷받침한 최초의 정치지도자들이 아니다. 놀라운 건, 이제 현실적 신중성이 "스마트하냐"의 문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책이 우둔하지 않고 스마트하다며 변명하는 일은 자신의 학력이 출중하다며 변명하는 일과 매우 닮았다. 국무장관에 막 임명되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부장관들 몇몇을 선임하며 이런 연관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저는 스마트 파워의 활용에 대해 말했습니다. 스마트 파워의 핵심은 스마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능한 분들은 제가 아는 가장 스마트한 분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34]

정당 간 대결이 과열되는 시점에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담론은 그럴듯한 호소력이 있다. 이로써 화자는 이념 전쟁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며, 뭐가 도덕적이냐에 대한 탁상공론보다 뭐가 스마트하고 센스 있으며 신중하냐에 대한 실용적 토론으로 물러서는 자세를 보일 수 있

다. 오바마도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초당파적이며 능력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발언 방식에 기댔다. 인종, 민족, 성 평등과 관련된 쟁점들에서 오바마는 유창하게 진짜배기의 도덕적 주장을 폈다. 그러나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으로 넘어가면 마치 본능인 것처럼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비이념적 언어를 사용했다.

오바마는 그의 초기 정치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연설을 2002년에 했다. 당시 그는 일리노이 주 출신 상원의원이었고,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것은 6년 뒤에 힐러리 클린턴과 구별되는 그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결국 그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전국적 수준의 정치인으로 떠오르기 전부터도 오바마는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논법을 즐겨 쓰고 있었다. 당시 시카고에서 이 젊은 상원의원은 반전을 선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반대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둔한 전쟁dumb war이기 때문입니다."[35]

그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중 오바마는 그의 외교 정책 노선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아주 짧고 거친 말로 요약해 보였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자."[36]

2013년 오바마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두고 전반적인 예산 감축에 반대하며 공화당과 크게 대립했다. 그는 또 다시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논법에 의지했다. "일을 센스 있게 하는 법이 있고, 일을 우둔하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는 버지니아 주의 조선공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며칠 뒤 기자회견에서는 이랬다. "우리는 우둔하고 제멋대로인 방식으로 마구 예산을 잘라버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스마트한 세출

절감과 재정 지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37]

오바마는 스마트한 세출 삭감과 세입 증대 수단이야말로 일을 센스 있게 하는 것이며, 이념적 대립을 면할 수 있는 비당파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저는 이 일이 특정 당파에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2년 동안 제안했던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실현했던 방식이죠."[38] 그는 어째서 그의 대통령 선거 유세 때 내건 정책이 비당파적일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엘리트는 그들의 '스마트한 정책'에 대해 그 당파성을 모를 뿐 아니라, 입이 닳도록 "스마트하다", "우둔하다"를 말함으로써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도 까맣게 모르는 것 같다. 2016년 많은 노동자들은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자신들을 내려다본다는 느낌에 분을 품었다.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즘의 반격에 힘을 실어준 이 불만은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여론 조사는 다수의 노동계급 유권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려준다.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가 지지받기 힘들 때(힘들지만 완전히 외면되는 것은 또 아닐 때다), 학력주의는 최후의 면책적 편견이 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학력이 시원치 않은 사람에 대한 멸시는 다른 부분에서 시원치 않은 집단에 대한 멸시보다 훨씬 두드러진다. 아니면 적어도 훨씬 잘 통용된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실시된 일련의 설문조사에서 사회심리

학자 연구팀은 대학을 졸업한 응답자들이 다른 약점보다 대학 졸업을 못한 약점이 있는 집단에게 더 반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전형적인 차별 대상 집단들 즉 무슬림, 터키 출신 유럽 거주민, 빈곤층, 비만인, 시각장애인, 저학력자 등에 대해 고학력 유럽인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저학력자가 가장 기피됨을 알 수 있었다.[39]

미국에서 실시된 비슷한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유럽과 다른 차별 대상 집단들을 예시했다. 흑인들, 노동계급, 빈곤층, 저학력자였다. 미국인들은 이 가운데 저학력자에 대해 가장 낮은 평가를 했다.[40]

대졸 엘리트가 그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을 어떻게 낮춰 보는지를 넘어, 이 연구보고서들의 저자들은 몇 가지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냈다. 첫째, 그들은 교육 받은 엘리트가 교육 수준이 낮은 대중보다 깨어 있어서 더 관용적이라는 익숙한 생각이 어긋남을 포착했다. 그들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은 엘리트는 보다 못한 교육 수준의 대중에 비해 편견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편견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더욱이 엘리트는 그런 편견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인종주의와 성차별주의에는 반대할지 모르나, 저학력자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때?'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41]

둘째, 대졸 엘리트들이 편견에 거리낌 없는 까닭은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와 관련이 있다. 엘리트는 가난이나 출신 계층을 따지기보다 학력을 따져 노동계급을 멸시한다. 학력 이외의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들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낮은 학력은 개인의 노력 부족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래서 대학에 못 간 것은

그 개인의 책임이라 여긴다. "노동계급과 비교해, 저학력자는 보다 자기 책임이 크고 더 비난받을 만하다 여겨진다. 그들에 대해서는 분노 감정이 많고, 호감이 적다."[42]

셋째, 저학력자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감정은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다. 저학력자들 스스로도 그렇다. 이는 능력주의적 성공관이 얼마나 사회에 깊이 파고들어 있으며,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얼마나 사기 저하를 겪고 있는지 보여준다. "저학력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손가락질에 저항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반대로 그들은 그런 손가락질을 내면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학력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자업자득이며 욕먹어도 싸다고 여기는 듯하다. 스스로에게도 말이다."[43]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능력주의적 사회에서 대학 진학이 계속 강조됨으로써 비대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된다고 본다. "교육이야말로 사회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권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집단이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화될 위험성을 키운다." 이는 사람들이 불평등을 더 선뜻 받아들이게 하며, 성공은 능력 나름이라고 믿기 쉽도록 한다. "교육을 개인 책임이라 여기게 되면 교육 격차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줄어들 것이다. 교육 성과는 대체로 개인 하기 나름이라 여겨지게 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성공 및 실패 또한 그렇게 된다."[44]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2000년대 미국과 서유럽에서 비대졸자 시민은 단지 업신여겨질 뿐이 아니다. 선출 공직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다. 미 의회에서는 하원의원 95퍼센트와 상원의원 100퍼센트가 대졸자다. 이는 소수의 대졸자가 다수의 비대졸자를 통치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 성인의 삼분의 이가 비대졸자이지만, 그 가운데 연방의회에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다.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의회에 고학력자가 많기는 했지만 1960년대만 해도 상원의원 사분의 일과 하원의원 사분의 일이 비대졸자였다.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의회는 인종, 민족, 성별에 있어서는 더 다원화되었다. 그러나 학력과 출신계층에서는 훨씬 일원화되었다.[45]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결과는 '노동계에서는 아주 극소수만 선출직에 몸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의 약 절반은 육체노동, 서비스직,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선출 전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던 연방의회 의원은 2퍼센트에 못 미친다. 주의회의 경우, 노동계급 출신자는 3퍼센트에 불과하다.[46]

학력주의는 영국과 유럽의 대의정부도 바꿔놓았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같이 대졸자가 비대졸자를 통치하고 있다. 영국 전체를 통틀어 70퍼센트는 비대졸자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12퍼센트만 그렇다. 하원의원은 열 중 아홉이 대졸자이며 넷 중 하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왔다.[47]

지난 40년 동안 영국 노동당은 하원의원들의 교육과 출신계층에서

크나큰 변화를 겪었다. 1979년에는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의 41퍼센트가 비대졸자였다. 2017년에는 16퍼센트만이 그렇다.

이러한 학력주의 밀물은 노동계 출신 하원의원의 급썰물과 함께 했다. 이제 그들은 하원의 4퍼센트만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급을 대변해온 노동당의 계급 구성은 가장 급격히 바뀌었다. 1959년에는 노동당 하원의원의 37퍼센트가 육체노동자 출신이었다. 2015년에는 7퍼센트만이 그랬다. 영국 정치학자 올리버 히스의 말처럼, "하원의원 출신 구성의 그러한 변화는 의회가 영국 국민을 대표하는 범위를 좁혔다. 노동당은 전통적인 노동계급 대변 역할을 훨씬 덜 하게 되었다."[48]

보다 학력이 낮은 사회 구성원들은 서유럽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밀려나고 있다. 미국, 영국과 비슷한 패턴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대의정부는 고학력자들에게 점령되었다. 이처럼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 성인의 70퍼센트 가량은 비대졸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국회에 들어간 사람은 극소수다.[49]

독일 연방의회는 83퍼센트가 대졸자다. 2퍼센트도 안 되는 의원들만이 직업계 중학교(하우프트슐레)가 최고학력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는 82~94퍼센트의 국회의원이 대졸자다. 이들 나라의 내각 구성원은 학력 수준이 더 높다. 가령 앙겔라 메르켈의 2013년도 내각은 15명의 장관 중 9명이 박사 학위 소지자였다. 그리고 남은 6명 가운데 1명만 빼고는 석사 학위가 있었다. 독일 정치에서 박사학위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 때문에 여론의 분노에 밀려 장관이 사임한 사례들도 있다.[50]

정부에 비대졸자가 거의 없는 상황은 능력주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전례가 없던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근로 인구가 투표권을 갖기 이전에도 그랬음을 되돌아보는 건 다소 씁쓸할 수 있다. 오늘날 유럽 의회의 높은 고학력자 비율은, 19세기 말 재산 기준으로 투표권을 제한했던 때와 비슷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19세기 중반과 후반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대졸자였다.[51]

그런 양상은 보통선거가 이루어지고 사회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의회 구성을 민주화한 20세기에 바뀌었다. 192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 비대졸자 국회의원들은 현저히 늘어 입법부의 삼분의 일에서 이분의 일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대졸자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비대졸자 국회의원은 과거 귀족과 지주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52]

어떤 이들은 고학력 대졸자들이 정부를 이끌어간다면 환영할 일이지 문제될 게 무엇이냐고 할지 모른다. 물론 다리를 지을 때는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를, 맹장수술을 할 때는 가장 숙련된 의사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최고의 대학을 나온 국회의원을 원하면 안 될 까닭이 뭘까? 빵빵한 학력을 갖춘 고학력 리더들이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더 합리적인 정치 담론을 이루지 않겠는가?

아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 연방의회와 유럽 국회들에서 오가고 있는 정치 담론을 슬쩍만 들어 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좋은 통치는 실천적 지혜와 시민적 덕성을 필요로 한다. 공동선에 대해 숙고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함양될 수 없다. 최고의 명문대

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리고 최근의 역사적 경험은 도덕적 인성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 판단 능력과 표준화된 시험에서 점수를 잘 따고 명문대에 들어가는 능력 사이에 별 연관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최고의 인재들'이 저학력자 동료 시민들보다 통치를 잘한다는 생각은 능력주의적 오만에서 비롯된 신화일 뿐이다.

러시모어 산의 큰 바위 얼굴로 기념되고 있는 네 사람의 미국 대통령들 중 둘(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햄 링컨)은 비대졸자다. 또한 마지막 비대졸자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 중 하나로 꼽힌다.[53]

하버드 졸업생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여러 배경을 가진 자문단과 뉴딜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했다. 그 자문위원들은 최근 민주당 대통령들의 자문위원들보다 더 유능했으나, 학력은 훨씬 떨어졌다. 1930년대에는 경제 관련 전문성이 최근 수십 년처럼 워싱턴의 정책에서 중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4] 토머스 프랭크는 뉴딜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졌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루스벨트가 가장 신임하던 해리 홉킨스는 아이오와 주의 사회복지사였다. 법무장관을 거쳐 대법원 판사에 임명된 로버트 잭슨은 법학 학위가 없는 변호사였다. 루스벨트의 구제금융 정책을 추진한 제시 존스는 텍사스 주의 사업가였는데 유수 금융기관들의 관리자가 되는 데 아무 주저가 없었다. 루스벨트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장에 선임한 매리너 에클스는 유타 주 작은 마을의 은행원이었고 비대졸자였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무장관일 헨리 월리스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학업을 마쳤다.[55]

최근 수십 년 동안의 학력주의 열풍은 영국에서도 좋은 통치를 이뤄내지 못했다. 오늘날 영국인의 겨우 7퍼센트만이 사립학교에 다니며, 1퍼센트 이하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입학한다.

그러나 통치 엘리트는 엄청난 비중으로 그런 소수 중에서 충원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의 2019년도 내각 거의 삼분의 이가 사립학교 출신이며, 거의 절반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를 나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볼 때 대부분의 보수당 내각 장관들과 노동당 내각 장관의 삼분의 일 정도가 사립학교를 나왔다.[56] 그러나 그 시기 가장 성공적인 영국 정권 중 하나는 학력이 가장 낮고 출신계층 분포가 가장 넓은 정권이었다.

1945년 클레멘트 애틀리의 노동당은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을 눌렀다. 애틀리는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그러나 그의 내각 구성원은 네 명 중 한 명만이 사립학교 출신이었고, 그것은 그 이후의 어느 영국 내각보다 낮은 수치였다. 그의 장관 가운데 일곱 명은 탄광 갱부 출신이었다.[57]

매우 유능하다고 평가받은 애틀리의 외무장관 어니스트 베빈은 전후 세계질서의 설계자 중 하나였다. 그는 11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노동조합 지도자로 성장했다. 하원 의장과 부수상을 지낸 허버트 모리슨은 14세에 중퇴하고 지방정부에서 일하며 명망을 쌓았는데, 런던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한 공로가 컸다. 보건부 장관 어나이린 베번은 13세에 중퇴한 뒤 웨일스에서 광부로 일했고, 장관이 되어서는 영국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수립했다. '20세기 영국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권'으로 평가되는 애틀리 정권은 노동계급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애틀리의 전기 작가는 "영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에 쓰일 윤리 언어를 마련

했다"고 평했다.[58]

의회를 고학력자 계층의 전유물로 만들면 정부가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 대표성만 더 낮아질 뿐이다. 이로써 노동계급은 주류 정당에서 배제되며 특히 중도좌파 정당에서 그렇게 된다. 그에 따라 정치판은 학력에 따라 양극화된다. 오늘날 정치판을 가르는 가장 깊은 균열 중 하나가 바로 대졸자와 비대졸자 사이의 균열이다.

학력 간 균열

2016년 미국의 비대졸자 백인의 삼분의 이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고학력자 표의 70퍼센트를 쓸었다. 선거학자들은 소득보다 학력이 트럼프 지지 여부에 더 확실한 변수가 되었다고 본다. 비슷한 소득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학력이 높은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낮은 사람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59]

학력 간 균열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대졸자 비중이 높은 50개 카운티 가운데 48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4년 전 버락 오바마가 얻은 표보다 많은 표를 얻었다. 대졸자 비중이 가장 낮은 50개 카운티 가운데 47개에서는 클린턴의 득표가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나빴다. 프라이머리 초기에 거둔 그의 승리를 자축하며 트럼프가 이렇게 외친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난 덜 배운 사람들을 사랑한다!"[60]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좌파 정당들은 저학력자의 지지를 얻고 우파 정당들은 고학력자의 지지를 얻어왔다. 능력주의 시대에 이 패턴

은 뒤집혔다. 오늘날 고학력자들은 중도좌파 정당에 투표하며, 저학력자들은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이런 패턴 역전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놀랄 만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61]

1940~1970년대에 미국에서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민주당에 투표했다. 영국에서는 노동당, 프랑스에서는 여러 중도좌파 정당들이 그들의 지지를 얻었다. 1980~1990년대에 학력 간 균열은 크게 좁혀졌다. 그리고 2000~2010년대에 좌파 정당들은 비대졸자의 지지를 잃어버렸다.[62]

이런 역전 현상은 보통 부유한 유권자들은 여전히 우파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지만 고학력 유권자 다수는 중도좌파를 지지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복잡해 보인다. 흑인, 라틴 계열, 아시아 계열 미국 유권자들은 학력 수준에 상관없이 계속 민주당을 지지해왔다. 그러나 2010년대가 되자 학력이 가장 결정적인 정치 균열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한때 노동자를 대변했던 정당들은 갈수록 능력주의 엘리트의 정당이 되고 있다.[63]

민주당이 전문직업인의 정당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미국에서 비대졸자 백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트럼프 당선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2018년 총선에서, 비대졸자 백인 유권자의 61퍼센트가 공화당에 투표했으며 민주당에는 37퍼센트만이 표를 던졌다. 학력 간 균열의 심화는 대졸자 비중이 가장 높은 30개 선거구를 봐도 알 수 있다. 1992년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함께 진행된 총선에서 이들 선거구들은 양분되었다. 절반은 민주당 후보를,

절반은 공화당 후보를 당선시켰다. 2018년 공화당은 그 중 3개 선거구에서만 이길 수 있었다.[64]

영국에서는 노동당의 지지기반이 비슷하게 이동 중이다. 1980년대 초 노동당 하원의원 삼분의 일 정도가 노동계급 출신이었다. 2010년 그 비중은 열 중 하나가 채 안 된다. 올리버 히스에 따르면 노동계 출신 노동당 하원의원의 감소는 "이 정당이 노동계급 유권자들에게서 얻는 인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점점 더 노동당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대도시 엘리트들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65]

그런 불만은 먼저 저학력 유권자들의 투표 감소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에는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저소득 유권자들은 고소득자들에 비해 브렉시트에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력 격차에 따른 찬반은 더 뚜렷하게 갈렸다. 비대졸자 70퍼센트 이상이 브렉시트에 찬성했으며, 대학원 학위자의 70퍼센트 이상은 반대했다.[66]

이런 패턴은 지역 투표 양상에서도 나타난다. 대졸자 비중이 제일 낮은 20개 지자체 중 15개에서 브렉시트 찬성표가 많았다. 고학력자 비중이 제일 높은 20개 지자체에서는 모두 반대표가 많았다.[67]

프랑스에서는 정당 체제가 다름에도, 비슷한 학력 간 균열 현상이 지난 수십 년간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 비대졸자는 사회당과 그 밖의 좌파 정당에 등을 돌렸으며 대신 고학력 엘리트가 그런 정당의 주 지지자들이 되었다. 1950~1960년대 좌파 정당이란 노동계급의 정당이었다. 비대졸자가 좌파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은 대졸자에 비해 20퍼센트 정도 높았다. 1980년대에는 격차가 좁아졌고, 2010년대에는 역전되었

다. 이제 대졸자가 좌파 정당 지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대졸자보다 10퍼센트 높다. 30퍼센트의 수치가 역전된 것이다.[68]

피케티는 좌파 정당들이 노동자 정당에서 지식계급, 전문직업인 정당으로 탈바꿈한 것이 왜 그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불평등 증가에 대응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본다. 한편 높은 학력을 못 가진 사람들은 엘리트가 밀어붙이는 세계화에 반발하고 포퓰리스트, 국수주의자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 미국의 트럼프나 프랑스의 민족주의-반이민 정당을 이끄는 마린 르펜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다.[69]

2017년 진보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을 꺾었다. 마크롱의 당선은 일부 평론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시장친화적 세계화 프로그램을 이끄는 젊고 매력적인 정치인(클린턴이나 블레어, 오바마를 연상시키는)의 손으로 '포퓰리즘의 반격'이 진압될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의 능력주의 정치인들처럼 그 역시 대졸자와 고학력자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70]

그러나 마크롱의 인기는 금방 시들었다. 그의 정권은 계속되는 가두시위에 직면했다. 시위대는 본래 운전자의 사고방지용 의복인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나섰다. 대개 파리 외곽에 사는 중산층 노동계급 주민들로 이루어진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 마크롱의 교만해 보이는 태도, 세계화에 뒤처진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제정책 등에 분노했다. 마크롱이 속한 당의 어느 원로 정치인은 "어떤 문제 때문에 정권이 이런 저항을 맞이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 우리는 너무 지적이고, 너무 섬세했던 거죠."[71]

우리 시대의 거침없는 학력주의는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포퓰리즘 및 민족주의 정당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며, 대학 학위가 있고 없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능력주의의 가장 큰 상징인 고등 교육 제도에 대한 당파적 견해로 이어졌다. 2015년에 공화당과 민주당은 입을 모아 "대학이 이 나라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는 각자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오늘날 59퍼센트의 공화당원들이 대학이 이 나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며, 33퍼센트만이 고학력을 좋게 보고 있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원들은 대학이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동의한다(67퍼센트가 동의, 반대 의견은 18퍼센트다).[72]

능력주의의 승리에 따른 피해 중 하나로 '고학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때 기회의 문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대학 학위는 이제 (적어도 일부에게는) 학력주의자의 특권과 능력주의 오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오로지 교육만이 불평등의 해답이라 하는 사회적 상승 담론은 부분적으로 비난받는다. 대학 학위가 품격 있는 직업과 사회적 명망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근거로 정치를 하니 민주주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은 비대졸자의 사회적 기여를 폄하하며 사회의 저학력 구성원들에 대한 편견을 부추긴다. 그리고 노동계급 전체를 대의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배제한다. 그 결과 정치적 반격을 겪는다.

기술관료적 담론

이런 학력주의 병폐와 가깝게 이어진 것이 기술관료적인 공적 담론의 왜곡이다. 정책 결정이 '스마트하냐 우둔하냐'의 문제로 여겨질수록 '스마트한 사람(전문가나 엘리트)'이 결정하고, 일반 시민들이 토론과 결의를 하는 일은 배제하는 게 옳다고 여겨지기 마련이다. 능력주의 엘리트들에게 '스마트하다'와 '우둔하다'의 담론은 도덕 및 이념적 반대에 대해 비당파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런 반대는 민주정치의 핵심에 속한 것이다. 정당정치의 갑론을박을 뿌리치고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면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질문을 저버린 채 정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기술관료적 공적 담론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가 좋은 사례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는 당대의 어떤 정치인도 못 따라잡을 정도로 언어의 나래를 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를 불렀다. 교회 안에서 혐오에 복받친 총잡이들의 손에 살해된 교구민들을 애도하며 했던 그의 연설은 현대 미국 대통령의 연설 가운데 가장 격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민주적 통치에 대한 비전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오자, 오바마는 뼛속까지 기술관료임을 보여주었다. 인기 있는 대통령에 대한 너무 직설적인 독설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설명할 기회가 허락되기를 바란다. 민주사회를 통치하려면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대에 직면하며 통치하면 어떻게 그런 반대가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도 꿰뚫고 있

어야 한다. 오바마는 민주적 반대란 보통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생기는 거라고 여겼다. 정보 부족이 문제라면 해법은 정보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 동료 시민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면 그런 사람이 동료 시민을 계몽하여 뭐가 제대로 된 결정인지 깨우쳐주는 것이 될 터다. 대통령의 리더십이란 도덕적 권유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바마는 2007년 그의 대선 유세 초기에 구글 사원들 앞에서 연설하며 이런 식의 통치관을 분명히 드러내 보였다. 그는 "미국을 돌면서 배운 것 하나가 미국 국민은 근본적으로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용의 정신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뿐이죠"라고 말했다. 그 이유가 뭘까.

> 왜냐하면 국민들은 단지 잘못된 정보를 갖거나 너무 바쁘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느라,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로 있지요. 또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우리의 정치 과정이 뒤틀리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면, 미국 국민의 본성은 훌륭하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령탑Bully Pulpit이어야 하죠.[73]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Bully Pulpit'이라는 말을 100년 전에 처음 쓴 뒤로 이 말은 대통령의 도덕적 모범, 국민 사기 진작자로서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은 팩트와 데이터, 좋은 정

보의 집합소라는 말로 의미가 변했다. 이야말로 기술관료적 정치관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는 단지 능력주의적 오만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 나라를 이루는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그들이 정보를 판단할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짜 전문가들이 그들 대신 정보를 판단하고 그들 입맛대로 팩트를 선별해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그렇게 해야 미국 정치과정의 '뒤틀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염두에 둔 문제는 고도로 집중된 경제권력이 정치과정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도, 일반 대중에게 공동선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촉구하는 것도 아니었다. 더 나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저는 정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성과 사실을 믿으며 증거와 과학 그리고 피드백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글 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 능력을 백악관에서 재구축하고 싶습니다."[74]

이런 기술관료 신념에 찬 발언이 주로 기술산업 종사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중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정치 비전에 충실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중 또 다른 사례는 기술관료 정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오바마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학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 임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썼다. 가령 의료보험 개혁을 놓고 그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갖는 도덕적 정당성은 거의 말하지 않고, '비용 곡선을 꺾을' 필요성에 대해 주구장창 말했다. 말하자면 의료비 증가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비용 곡선을 꺾을' 필요

성이란 게 별로 호응을 못 받았음에도, 그는 이런 식의 말을 60회나 하며 의료보험 개혁안의 효용을 주장했다.[75]

최근 경제학자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적 인센티브를 주자는 주장을 해왔다. 이런 인센티브 이야기는 하도 널리 퍼져서 '인센티브제화하다incentivize'라는 새 동사까지 만들어졌다. 21세기 초의 많은 사회과학자들, 경영 컨설턴트, 기업 임원들처럼 오바마는 시장 메커니즘이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센티브제화'를 받아들였다. 그는 기술 개발, 중소기업 고용, 클린 에너지 개발, 물 관리체계 개선, 사이버 보안책 보완, 건물 에너지효율화 프로그램, 국민 영양 상태 개선, 효과적인 보건 서비스, 학교 환경 개선, 기업 책임 강화 등등의 숱한 정책에 이 인센티브제화를 주문했다.

인센티브제화는 당파주의나 이념적 논쟁을 피하려는 오바마의 본능에 잘 들어맞는 기술관료적 개념이었다. 이는 돈 욕심을 활용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강압과 자유방임적 시장 선택 사이의 적절한 중용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전 대통령들은 거의 이 말을 쓰지 않은 반면, 오바마는 이런 저런 일에 '인센티브제화'를 100번도 넘게 언급했다.[76]

오바마는 그의 정치 언어 가운데 특히 '스마트'를 정책에 마구 붙여씀으로써 기술관료정치와 능력주의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명해 주었다. 오바마에게 스마트하다는 것은 궁극적인 찬사였다. 스마트 외교, 스마트 대외정책, 스마트 규제, 스마트 성장, 스마트한 세출 절감, 스마트한 교육 투자, 스마트 이민정책, 스마트한 인프라 계획, 스마트한 법집행, 스마트 무역 정책, 스마트 에너지 정책, 스마트 기후 정책, 스마트한 재

정 지원 개혁, 스마트한 시장 개혁, 스마트 환경규제, 스마트 개발, 스마트한 시장중심적 혁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s 등등이 그랬다. 임기 중 오바마는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대해 찬양하는 말을 100번 이상 했다. 전체적으로 그는 '스마트하다'라는 형용사를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900회 이상 붙여서 썼다.[77]

기술관료적 접근을 정책에 쓸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정책결정권이 소수 엘리트에게 돌아가고 그만큼 일반 시민은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설득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제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자의에 의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거나 윤리 경영을 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의 대안일 뿐만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는 방법'의 대안도 된다.

테크노크라시냐 데모크라시냐

이념 문제를 피하고 경제 쪽으로만 이야기하려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담론은 공적 담론이 갈수록 거칠고 난폭해지는 추세(정당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트윗 악플을 날려댐에 따라)와 우연히 겹친다. 기술관료적 담론과 고성 경쟁은 민주 시민을 움직이는 도덕적 신념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두 쪽 모두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경쟁적 개념들을 갖고 합리적으로 토론하려는 태도를 외면한다.

2016년 포퓰리즘의 갑작스러운 상승(영국의 브렉시트 결정과 미국의

트럼프 승리)은 능력주의 엘리트와 신자유주의적, 기술관료적 정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어느 브렉시트 열혈 지지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나라에 전문가는 차고 넘쳐요."[78]

오바마는 그의 입장에서 임기 말에 벌어진 정치적 혼란을 이해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트럼프가 그의 후임자로 선출되고 2년 후인 2018년, 오바마는 "세계화 지지자들이 뒤처지는 사람들의 존재 사실을 충분히 빠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나치게 안이했다. 특히 냉전 이후 미국 사회 일부와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뽐냈다고 볼 수 있다."[79]

그러나 트럼프 시대에 양극화된 정치를 놓고 오바마는 대중이 기본 사실들에 대해 의견을 같이할 수 없음이 일차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왜 우리 정치에 그렇게 병목 현상과 독기, 양극화 현상이 많은가 하면, 부분적으로는 팩트와 정보의 공통적인 베이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폭스뉴스〉를 보는 사람과 〈뉴욕타임스〉를 읽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단지 의견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사실에 있어서 벌어지는 격차다. 마치 뭐랄까, 인식론상의 차이와 같다."[80]

그는 그런 '현실의 충돌'에 대해 직접 본 일을 근거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 **Washington Consensus**
냉전 붕괴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삼고 그 제도와 관행을 따라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었는데, 미국 경제학자 존 윌리엄슨이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불렀다.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동안 우리가 마주칠 가장 큰 도전은 '건전한 시민 토론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다. 그런 토론은 내가 만일 "이건 의자다"라고 하면, "그래, 의자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토론이다. 지금 우리는 "이것은 좋은 의자인가?", "이 의자를 고쳐야 할까?", "이 의자를 여기서 옮길까?" 등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의자가 아니라 코끼리야"라는 말은 꺼낼 수 없다.[81]

물론 정치적으로 '사실 관계 논란'이 의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울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여기서 '방 안에 있는 코끼리'는 사실 기후변화를 의미했다. 오바마는 기후변화의 존재 자체나 그것이 인간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토론이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이다.

오바마는 분명 그의 후임자가 기후변화 부정 세력들에 넘어가 (오바마 자신이 가입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이를 이념적 차이만이 아니라 트럼프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과학 자체를 저버린 데서 비롯되었다 여겼다.

사실 "나는 과학을 믿는다"는 민주당의 선거 구호가 되었던 바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그 구호를 썼고, 오바마는 대통령으로서 썼다. 그리고 2020년 대통령 후보 지명을 놓고 무수한 민주당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썼다. 그 구호는 은근히 인기를 잃은 종교의 반열에 과학을 올려놓는 것처럼 들렸다.[82]

오바마는 '무엇보다 팩트가 먼저'라는 그의 오랜 신념을 뒷받침하고자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 상원의원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모이니한

은 언젠가 고집불통의 논쟁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견에 사로잡혀 있군요. 그러나 당신 자신의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오바마는 이 말을 인용하며 때때로 '모이니한이 아주 스마트했고 그 적수는 그만큼 스마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83]

그러나 정치적 이견을 단지 액면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과학을 부정하는 일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사실과 의견이 정치적 설득 과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 이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기본 사실에 전원 동의해야 하며, 그 이후에 우리 각자의 의견과 신념을 가지고 토론하면 된다'는 생각은 기술관료적 기만이다. 정치 토론은 종종 의제와 연관된 사실을 어떻게 잡아내고 정의할지에 대해 벌어진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프레임화하는 데 일단 성공하면, 그는 장기적으로 그 논쟁에서 이긴 셈이다. 모이니한의 말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의견은 우리의 인식을 사로잡는다. 의견이란 것은 사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정립된 뒤에 비로소 생겨나는 게 아니다.

기후변화 논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반론의 주된 까닭이 정보 부족이나 과학의 거부에 있다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과학 지식이 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대가 가장 심하리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과학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입

장이 양극화된다.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더 의심이 많으며, 그들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런 경향도 커진다. 고졸 또는 그 이하 학력의 공화당원들 중 57퍼센트가 지구온난화는 대체로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대졸자 공화당원들은 74퍼센트가 그렇게 믿는다. 민주당원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기후변화를 더 우려한다. 고졸 또는 그 이하인 민주당원은 27퍼센트가 지구 온난화가 과장되었다고 본다. 대졸자 민주당원은 15퍼센트만 그렇게 생각한다.[84]

따라서 양당 지지자들 사이에 기후변화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정도는 대졸자(59퍼센트 차이) 간이 비대졸자(30퍼센트 차이) 간보다 두 배나 더 크다. 이와 같은 패턴은 '기후변화가 과연 인류의 책임인지'를 놓고도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환경 변화 때문이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그렇다"라고, 대부분의 민주당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두 당의 고학력자들 간 의견차는 53퍼센트였는데, 저학력자끼리는 단지 19퍼센트의 차이를 보였다.[85]

보다 상세한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치적 양극화는 일반적 교육수준의 차이뿐 아니라 과학 지식의 차이에서도 나타난다. 과학 지식이 보다 많은 사람(이수한 과학 과목의 숫자와 과학 지식 관련 테스트로 측정)은 과학을 더 모르는 사람에 비해 각자가 속한 정당의 기후변화관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86]

이런 발견은 기후변화를 늦추는 일에 미온적인 사람은 단지 과학을 잘 몰라 그런 거라는 생각에 제동을 건다. 기후변화를 놓고 정당 간 나뉜 입장은 사실과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관이 달라서 생긴 것

이다. 더 많은 사람이 과학을 알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옥신각신이 사라질 거라는 가정은 오류다. 우리가 사실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술관료적 신념은 정치적 설득의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2018년 MIT 연설에서 오바마는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토론을 하게 될 날을 상상한다"며 "그것은 오직 모든 사람이 기초적 사실들에 동의할 때 가능해진다"고 했다.

> 저와 당신이 기후변화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지요. 그 때 당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중국과 인도가 많은 석탄을 태우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다만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해요. 그러면 언젠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때마침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반대합니다."
>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흠, 글쎄요. 우리가 지금 몇몇 스마트 기술에 투자하고 클린 에너지 투자에 인센티브제화를 갖추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결국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예요."[87]

오바마는 우리 모두가 이런 허심탄회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하며, 기후변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한탄했다.[88]

그러나 그런 토론이 가능해졌다고 해도 결국 정치 토론으로서는 속빈강정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사실 '외면과 어리석은

행동이냐', 아니면 '가치중립적이고 기술관료적인 해결책이냐' 사이에만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는 기후변화 논쟁의 저변 깊숙이 존재하는 도덕적, 정치적 고려를 간과한 것이다.

기술관료적 입장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약점은, 그것이 겉보기로는 잡음의 여지가 없는 가치중립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한 규제 틀' 같은 이야기는 기후변화를 두렵고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도덕적, 정치적 질문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 화석연료 산업의 외부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민주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자연을 도구화하도록 부추긴 소비주의적 생활 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쓰고 버리는 문화"[89]라고 부른 그런 태도를 재고해야 할 것인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며, '과학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특히 경제를 대규모로 뜯어고치며 특정인들(그런 재편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기술관료적 엘리트들)의 잇속을 채우려 하는 게 아닌지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는 전문가들이 대답해야 할 과학적 질문들이 아니다. 권력, 도덕, 권위, 신뢰에 대한 질문들이다. 바로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시민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인 것이다.

지난 40년을 군림해온, 좋은 학력을 자랑하는 능력주의 엘리트의 실수 중 하나는 그러한 질문들을 정치 논쟁의 핵심에 제대로 집어넣지 못한 것이다. 민주주의 규범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능력주의 엘리트의 오만과 기술관료적 비전의 협소함에 대한 불만은 별 것 아닌 듯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 지금 이 지경까지 정치를 끌고 온 것이다. 그런 불만을 포퓰리즘적 권위주의자들이 잘도 써먹은 것이다. 능력주의와 기술관료 정치의 실패를 바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그런 불만을 제대로 접수하고 공동선의 정치를 다시 이미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단계다.